

유럽의 급진 이슬람주의 테러와 대응

: 프랑스, 영국, 독일을 중심으로

박보라



**유럽의
급진 이슬람주의
테러와 대응**

: 프랑스, 영국, 독일을 중심으로

박보라 borapark@inss.re.kr

INSS 연구보고서 2019-11 | 유럽의 급진 이슬람주의 테러와 대응 : 프랑스, 영국, 독일을 중심으로 | 박보라

2019 | INSS
Research
Report

INSS 연구보고서 2019-11

유럽의 급진 이슬람주의 테러와 대응

:프랑스, 영국, 독일을 중심으로

박보라

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유럽의 급진 이슬람주의 테러와 대응

:프랑스, 영국, 독일을 중심으로

박보라

INSS 연구보고서 2019-11

유럽의 급진 이슬람주의 테러와 대응

: 프랑스, 영국, 독일을 중심으로

발행처 사단법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발행인 조동호
주소 06295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20 인스토피아 빌딩
전화 02-6191-1000 (Fax. 02-6191-1111)
홈페이지 <http://www.inss.re.kr>
인쇄일 2019년 12월
발행일 2019년 12월
편집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ISBN 979-11-89781-17-0 (94340)
979-11-89781-05-7 (19)
가격 비매품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목차

국문초록	6	IV. 영국의 이민자 갈등과 급진 이슬람주의	70
I. 서론	8	1. 제로 이민국과 유럽 이슬람 정치세력의 중심	71
1. 연구배경과 목적	9	2. 영국의 급진 이슬람주의 대응과 대테러 정책	79
2. 연구범위와 방법	16	V. 독일의 이민자 갈등과 급진 이슬람주의	86
II. 유럽의 급진 이슬람주의 지하드와 이민자 문제	20	1. '가스트아르바이터'와 외국인 문제	87
1. 유럽의 급진 이슬람주의 개관	21	2. 독일의 급진 이슬람주의 대응과 대테러 정책	97
2. 유럽의 무슬림 인구 동향과 이민자 갈등	37	VI. 결론 및 한국에의 시사점	102
3. 유로 지하드의 등장	44	1. 결론 및 급진 이슬람주의 대응방향	103
III. 프랑스의 이민자 갈등과 급진 이슬람주의	52	2. 한국에의 시사점	107
1. 라이시테 원칙과 무슬림 사회통합의 문제	53	Abstract	112
2. 프랑스의 급진 이슬람주의 대응과 대테러 정책	65	참고문헌	114

국문초록

최근 몇 년 동안 유럽은 급진 이슬람주의 테러의 주요 무대가 되어 왔다. 2005년 7월 7일 영국 런던테러는 자생테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유럽 내 무슬림과 무슬림 공동체는 대테러 정책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특히 런던 7/7 테러범들이 평범한 개인이었다는 사실은 무슬림 이민자들을 급진 이슬람주의로 경도되게 하는 요인과 무슬림 이민자들을 주류사회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유럽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가운데 특히 무슬림 이민자는 사회적 통합이 어려운 집단으로 간주된다. 고유의 전통과 종교에 깊게 뿌리를 둔 무슬림의 사고 및 생활방식은 서구 유럽과 뚜렷한 차이가 있으며,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를 고수하면서 기존 방식의 변화를 완강하게 거부하기 때문이다. 9/11 테러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급진 이슬람주의에 기초한 자생테러와 이민자 폭동사태는 무슬림 이민자들과 유럽 주류 사회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유럽 주류사회와 무슬림 이민자 사이의 갈등을 단순히 종교적·문화적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비판을 받게된다. 따라서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유럽의 무슬림 이민자와 급진 이슬람주의 및 자생테러를 소수자 문제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무슬림 이민자들이 유럽의 주류사회로부터 분리되고, 이민자 갈등을 경험하며, 급진주의에 경도되는 배경과 테러를 감행하는 원인을 소수자 문제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급진 이슬람주의에 대한 대응 방향과 향후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급진주의, 폭력적 극단주의, 자생테러,
이민자 갈등, 무슬림 공동체

I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1. 연구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

최근 몇 년 동안 유럽은 급진 이슬람주의 테러¹의 주요 무대가 되어 왔다. 특히 2001년 9/11 테러의 주모자로 지목된 급진 이슬람주의 무장 조직인 「알카에다(Al-Qaeda)」는 2004년 3월 11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테러와도 연계성이 제기되었다.² 마드리드 시내 중심부의 열차역 3곳에서 발생한 폭탄테러로 인해 192명이 사망 및 1,800여 명이 부상하였으며, 마드리드 3/11 테러는 스페인 역사상 최악의 테러라는 평가를 받는다.³ 마드리드 3/11 테러는 유럽에 있어서도 1988년 스코틀랜드에서 발생한 팬암기 103편 폭파사건 이후 최악의 인명피해를 가져온 사건이었다.⁴

1 학문적 용어로서 '공포'와 '죽음과 같은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는 '테러(terror)'와 '정치적 목적달성 수단으로써 폭력의 사용이나 위협을 통해 심리적 충격과 공포를 유발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행위'인 '테러리즘(terrorism)'은 구분되어 사용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테러방지법」이나 대테러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의 테러정보통합센터, 경찰청 대테러센터 등 정부기관에서 '테러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테러'라는 단어로 통일되게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테러와 테러리즘을 구분하는 실익이 없으며, 학술적 차원에서만 구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정육상. "한국의 테러방지법 제정방향에 관한 연구: 외국의 입법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6호 (2009). pp. 279-310). 이 연구보고서에서도 '테러'라는 용어로 단일화해 사용한다.

2 비록 마드리드 3/11 테러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테러범들과 알카에다와의 직접적인 연계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알카에다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영향을 받은 지하디스트의 소행이라는 공식 설명이 있었다. 마드리드 3/11 테러 수사 및 재판 관련사항은 CNN, "Spain Train Bombings Fast Facts", (2019. 2. 25), 마드리드 테러와 알카에다 관련사항은 Fernando Reinares, *Al-Qaeda's Revenge: The 2004 Madrid Train Bombings*, (Woodrow Wilson Center Press and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7) 참조.

3 El Pais, "Sentencia por los Atentados del 11-M", (2008. 7. 17), 검색일: 2019. 8. 18.

4 *The Guardian*, "21 Guilty, Seven Cleared over Madrid Train Bombings", (2007. 10. 31), 검색일: 2019. 8. 18.

같은 해 9월 네덜란드에서는 이슬람교의 여성 처우를 비판적으로 다룬 단편영화인 「복종(Submission)」이 개봉하면서 네덜란드 무슬림 공동체의 강한 반발과 분노가 제기되었고, 11월 2일 영화를 제작한 테오 반 고흐(Theo Van Gogh)감독이 모로코계 네덜란드 이민자 모하메드 부바리(Mohammed Bouyeri)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⁵ 부바리는 네덜란드 무슬림 테러조직인 「호프스타드 네트워크(Hofstad Network)」의 조직원이었다.⁶ 연달아 유럽에서 발생한 급진 이슬람주의 테러사건들에 이어, 2004년 발표된 「9/11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국경 및 동북부 아프리카대륙, 동남아시아와 더불어 이주민으로 구성된 무슬림 공동체가 있는 유럽의 도시들을 급진 이슬람주의 테러조직의 향후 근거지로 명시하였다.⁷

2005년 7월 7일 영국 런던의 지하철과 버스를 대상으로 발생한 폭탄 테러는 유럽의 대테러 정책에 주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었다. 주도자였던 4명의 무슬림 이민자 가운데 3명이 영국에서 출생하고, 영국식 교육을 받은 이른바 ‘자생테러범(homegrown terrorist)’이라는 수사당국의 결론에 따라 유럽 내 무슬림과 무슬림 공동체는 대테러 정책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⁸ 특히 런던 7/7 테러범들이 증산층이라는 사실과 7/7 테러 이전에는 관계당국의 주목을 끌지 않았던 ‘평범한 영국 시민권

자들’이라는 사실은⁹ 무슬림 이민자들을 급진 이슬람주의로 경도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무슬림 이민자들을 주류사회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유럽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가운데 특히 무슬림 이민자는 사회적 통합이 어려운 집단으로 간주된다. 고유의 전통과 종교에 깊게 뿌리를 둔 무슬림의 사고 및 생활방식은 서구 유럽과 뚜렷한 차이가 있으며,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를 고수하면서 기존 방식의 변화를 완강하게 거부하기 때문이다.¹⁰ 연이어 발생한 급진 이슬람주의 테러를 비롯한 무슬림 공동체와 유럽국가 주류사회의 갈등은 무슬림 이민자 문제를 부각하였으며, 무슬림을 위험요소로 생각하는 대중의 시각이 강화되었다.¹¹

무슬림을 위험요소로 생각하는 시각이 강화되는데 9/11 테러를 서구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충돌로 설명한 ‘문명 충돌론’이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논의도 유럽의 급진 이슬람주의 테러와 무슬림 이민자 문제를 일종의 ‘문화전쟁’으로 지칭하고, 무슬림 이민자의 주류 사회로의 통합만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럽의 무슬림 이민자와 관련된 급진 이슬람주의와 자생테러 문제를 단지 종교 문화적으로만 접근할 경우 이 문제를 부당하게 단순화하고 왜곡할 소지가 있다. 무슬림은 일차적으로 종교적으로 규정되는 집

5 The New York Times, "Dutch Filmmaker, an Islam Critic, Is Killed", (2004. 11. 3), 검색일: 2019. 8. 18.

6 Lorenzo Vidino, "The Hofstad Group: The New Face of Terrorist Networks in Europe", *Studies in Conflict and Terrorism*, Vol. 30 (2007), pp. 579-592.

7 The National Commission on Terrorist Attacks Upon the United States, *The 9/11 Commission Report*, (2004), pp. 366-367.

8 BBC, "7 July London Bombings: 15 Changes to Anti-Terror Planning" (2015. 7. 7), 검색일: 2019. 9. 12.

9 House of Commons Report. *Report of the Official Account of the Bombings in London on 7th July 2005*. (London: House of Commons, 2006)

10 박규정, "독일 사회와 무슬림 터키 공동체", 『서유럽 무슬림과 국가 그리고 급진이슬람주의』 (서울: 아모르문디, 2009), pp. 132-133.

11 김종원, "유럽연합과 유럽의 무슬림", 『서유럽 무슬림과 국가 그리고 급진이슬람주의』 (서울: 아모르문디, 2009), p. 23.

단¹²이기에 무슬림의 상황과 동향이 종교적·문화적 측면만으로 설명된다는 시각은 편협할 뿐만 아니라 무슬림의 사고와 행위를 이슬람에 집착한 필연적 결과로 치부하므로 오류이다. 또한 종교 문화적 시각은 이러한 무슬림에 대한 단순화와 왜곡이 무슬림이 위치한 권력 관계의 산물이라는 사실은 간과한다는 지적이다.¹³

나아가 무슬림 이민자들이 정착한 유럽국가들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게 되며 각 국가별 무슬림 이민자가 처한 사회적 상황이 상이하하다는 점을 무시하게 된다. 비록 유럽의 무슬림 이민자들이 무슬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출신지역·계층에 따라 유럽 내에서도 상이한 계층을 이루며 이를 토대로 서로 다른 생활방식과 가치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고 유럽의 무슬림 이민자들을 무조건 동질적인 집단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유럽의 무슬림 이민자와 급진 이슬람주의 및 자생테러를 소수자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관점을 가지고자 한다. 사전적 의미에서 소수자란 “국가 내 소수의 집단으로 인종·종교·언어상 해당 국가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징 또는 전통을 공유하는 것”으로 정의된다.¹⁴ 이러한

정의대로 유럽의 무슬림 이민자를 소수자로 접근하게 되면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유럽의 주류사회로부터 구분되는지 과정을 주시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하위집단의 관점에서 유럽의 무슬림 이민자들이 구체적으로 주류집단과 어떠한 관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계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이들이 급진 이슬람주의에 경도되는 배경과 나아가 테러를 감행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소수자 문제는 하나의 일반적 사회문제이다. 따라서 특정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연구는 역사적·지역적 비교 연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질 수 있다. 유럽의 무슬림 이민자에 대한 연구가 역사적 변천이라는 차원을 포함하게 되며, 유럽 주요 국가에서 무슬림의 상황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유럽에서의 급진 이슬람주의 출현도 효과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에 소수자 문제가 존재하는 한, 증가하고 있는 무슬림 이민자와 관련 정책에 일종의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나. 연구의 목적

최근 10년간 발생한 테러사건 가운데 서구 유럽에서 발생한 2005년 영국 런던 7/7 테러 및 2015년 프랑스 파리의 바르틀랑 공연장 테러와 2016년 프랑스 니스의 트럭 테러, 2017년 영국 런던의 차량 및 흥기테러와 스페인 바르셀로나 차량 테러에 이르는 자생테러 및 외로운 늑대 테러는 급진 이슬람주의 및 극단주의가 주요 배경으로 제시된다. 비록 각각의 테러사건의 동기는 정치적 측면과 종교적 측면에서 상이하나, 급진 이슬람주의가 기저 원인과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

12 이슬람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며 따라서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은 모두 같은 하나님을 믿는 일신교이다. 이슬람(Islām)이라는 아랍어는 ‘순종’과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며,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신 유일신 ‘알라’께 절대 순종함으로써 육체와 정신의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종교적 함의를 갖는다. 이슬람교도들은 이처럼 알라의 뜻, 알라의 의지에 절대 복종하는 자들이기에 무슬림(muslim, 복종하는 자)이라 부른다. 손주영, “중동인의 종교, 이슬람의 이해”, 『국가안보정책연구소 기획총서: 중동의 새로운 이해』 (서울: 오름, 1999), p. 131.

13 이태숙, “서유럽 무슬림 문제를 묻는 방식”, 『서유럽 무슬림과 국가 그리고 급진이슬람주의』 (서울: 아모르문디, 2009), pp. 10-11.

14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21세기 정치학대사전』, 검색일: 2019. 9. 21.

적이다.

기존 급진 이슬람주의 테러에 대한 연구에서는 테러범에 대한 프로파일링 및 유형화 분류작업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명확한 프로파일링의 도출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면서¹⁵ 테러범들을 급진주의에 경도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비록 다른 범죄자 프로파일링과 같은 일반적 유형화는 어렵지만, 최근 서구 유럽국가의 자생 테러범들은 일정한 경향을 나타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구 유럽에서 발생한 급진 이슬람주의 테러, 특히 자생테러의 경우 20대 남성이 테러범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급진화가 시작되는 연령은 20대 이전으로 점차 낮아지는 저연령화 경향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서구 유럽국가처럼 무슬림이 주류를 이루는 사회가 아닌 국가의 자생 테러범들은 무슬림 이민자 1.5세대 또는 2세대가 주로 차지한다는 특징을 보인다.¹⁶ 그리고 불만을 가진 무슬림 개인이 급진화되는 과정에서 공동체는 개인의 ‘급진 이슬람주의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테러범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는 테러의 정당화, 테러행위 동조 및 지원행위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¹⁷ 이러한 점을 종합한다면 테러는 급진 이슬람주의의 부산물과 같은 결과이기에 급진 이슬람주의 테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결국 급진 이슬람주의 대응과 맥락을 함께

하게 된다.

한편 급진 이슬람주의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급진 이슬람주의 실태와 무슬림의 대응 국가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¹⁸, 유럽의 급진 이슬람주의와 자생테러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이 연구보고서는 유럽에서 급진 이슬람주의와 자생테러의 발생배경을 무슬림 이민자들의 소수자적 위치에 대한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첫째, 서구 유럽에서 급진 이슬람주의가 출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둘째, 서구 유럽의 무슬림 이민자들이 급진 이슬람주의에 경도되게 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셋째, 서구 유럽국가 가운데 ISIS(Islamic State of Iraq and al-Sham)의 지하드 참전에 합류한 외국인 전투원이 가장 많았고, ISIS 등장 이후 지하드 목적의 자생테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는 프랑스, 영국, 독일이다. 이 세 국가의 무슬림 이민자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지위와 이민자 갈등은 해당 국가의 급진 이슬람주의 및 자생테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나아가 세 가지 연구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대한 시사점 확인 및 정책적 대안 모색이 마지막 연구목적이다.

15 Andrew Silke, "Cheshire-cat Logic: The Recurring Theme of Terrorist Abnormality in Psychological Research", *Psychology, Crime & Law*, Vol. 4 No. 1 (1998), pp. 51-69; Edward Tverdek, "The Limits to Terrorist Profiling", *Public Affairs Quarterly*, Vol. 20, No. 2 (2006), pp. 175-203.

16 Jocelyn Cesari, "Muslims in Europe and the Risk of Radicalism", in R. Coolsaet (ed), *Jihad Terrorism and the Radicalisation Challenge in Europe* (Hampshire: Ashgate, 2011), pp. 97-107.

17 European Commission, *Radicalisation, Recruitment and the EU Counter-radicalisation Strategy* (2008).

18 김진아,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원칙 따라 이행계획 수립: 테러리즘과 한국의 대비방향", 『국방저널』 (2015), pp. 1-6; 서정민, "국내 폭력적 극단주의 위험 요인 분석", 『한국이슬람학회논총』Vol. 26 No. 1 (2016), pp. 121-150; 서정민, "문화갈등과 국내의 극단주의 인식", 『한국중동학회논총』Vol. 38 No. 1 (2017), pp. 37-57; 윤민우, "인도네시아 이슬람 극단주의 실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Vol. 50 (2017), pp. 107-206; 황병하, "아랍 스프링 이후 튀니지 극단주의에 대한 연구", 『중동연구』 Vol. 35 No. 2 (2016), pp. 21-59; 황병하, "아랍 스프링 이후 사우디 이슬람 극단주의의 등장과 정부의 반테러 정책", 『한국중동학회논총』 Vol. 37 No. 2 (2016), pp. 73-109; 황병하, "사우디 내 IS 극단주의 확산과 와하비주의 논쟁, 그리고 사우디 정부의 대응", 『한국이슬람학회논총』 Vol. 27 No. 2 (2017), pp. 61-111 참조.

2. 연구범위와 방법

가. 연구의 범위

무슬림이 다수를 이루는 이슬람 국가는 전 세계 대륙에 위치하고 있다. 전체 무슬림의 ⅔가 아시아 6개국(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인도, 이란, 방글라데시, 터키), 북아프리카 3개국(이집트, 알제리, 모로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개국(나이지리아) 등 총 10개국에 밀집해있다. 반면 연구대상에 해당하는 유럽국가에서 무슬림 인구비율은 낮은 편이다. 가장 무슬림 인구 비율이 높은 프랑스는 6~8%이며, 영국 4.4%, 독일 4.4%, 스페인 2%, 스웨덴 4.5%, 덴마크 3%, 벨기에 4%, 네덜란드 6.25%, 스위스 4.5%, 이탈리아 1% 등 비교적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급진 이슬람주의와 자생테러, 그리고 무슬림 이민자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국가는 프랑스, 영국, 독일 3개 국가로 한정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을 3개 국가로 한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에 거주하는 무슬림 중 45%는 프랑스(570만 명), 독일(500만 명), 영국(410만 명) 중 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이 3개 국가의 급진 이슬람주의와 자생테러, 무슬림 이민자 문제를 살펴본다면 유럽의 급진 이슬람주의와 자생테러 문제를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급진 이슬람주의에 경도되어 글로벌 지하드에 참여한 외국인 테러전투원(Foreign Terrorist Fighters, FTF)의 국적을 살펴보았을 때 상위 3개 국가는 프랑스(1900여 명), 영국(1,100여 명), 독일(1,000여 명)이다. 500여 명 미만이 참가한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제외하면 다른 유럽국가 출신의 외국인 테러전투원의 수는 100명 미만인 경우가 대다

수였다.¹⁹

셋째, 오늘날 유럽에서 무슬림 이민자 갈등과 급진 이슬람주의를 논의할 때 가장 먼저 다루어지는 주제는 테러와 ISIS의 위협이라 할 수 있다. 테러조직 최초로 물리적 국가를 선포하고 4,000여명 이상의 유럽 내 무슬림 이민자 2세·3세가 참전하도록 종용한 ISIS가 등장한 2014년 6월부터 2019년 8월 현재 유럽에서 발생한 급진 이슬람주의 테러사건의 수를 국가별로 살펴보자면 상위 3개국이 프랑스(26건), 영국(9건), 독일(6건)이 해당된다.²⁰

글로벌 지하드에 참여한 외국인 테러전투원의 수와 유럽 내 급진 이슬람주의 테러사건 수의 상위 3개국이 모두 일치하므로 유럽의 급진 이슬람주의와 자생테러, 그리고 무슬림 이민자 갈등을 분석하기에 프랑스, 영국, 독일의 비교가 현재 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넷째, 분석대상인 프랑스·영국·독일의 무슬림 이민자들은 주로 해당 국가의 노동력 수입을 목적으로 이주가 시작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무슬림 이민자의 이주 목적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우리나라 무슬림 이민자는 이주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남성이 여성에 비해 8:2 정도의 비율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분석 대상인 3개국 또한 이주 노동자 남성을 중심으로 무슬림 이민자가 유입되기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들 3개 국가에 대한 분석은 향후 우리나라의 무슬림

19 Joana Cook & Gina Vale, "From Daesh to 'Diaspora' II: The Challenges Posed by Women and Minors After the Fall of the Caliphate", *CTC Sentinel*, Vol. 12 No. 6 (2019), pp. 1-23.

20 Francesco Marone, "Homegrown Terrorism in Italy: A Happy Exception in the West?", presented to the 19th World Summit on Counterterrorism, (2019).

이민자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 연구의 방법

이 연구보고서는 유럽의 급진 이슬람주의 문제를 문헌자료와 2차 자료, 이민자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기존 급진 이슬람주의에 관한 연구보고서와 유럽 내 무슬림 이민자 갈등에 대한 논문 및 저서 등 문헌연구를 통해 이론적 설명을 위한 틀과 연구대상 국가인 프랑스·영국·독일의 무슬림 이민자 현황 및 무슬림 이민자의 소수자적 위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동향파악을 위한 2차 자료로는「유엔경제사회분과(UNDESA)」에서 수집하는 인구동향자료를 통해 유럽의 인구분포를 살펴보고 「국제이주기구(IOM)」의 이민동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퓨 리서치(Pew Research)」에서 제공하는 유럽 내 무슬림 인구 동향을 파악하여 현재 유럽 내 무슬림 인구에 대한 개관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영국·독일이라는 3개 유럽국가에 경험한 이민자 갈등과 급진 이슬람주의 문제, 그리고 급진 이슬람주의 대응책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가별 주요 이민자 갈등사례와 대응책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II

유럽의 급진 이슬람주의 지하드와 이민자 문제

1. 유럽의 급진 이슬람주의 개관
2. 유럽의 무슬림 인구 동향과 이민자 갈등
3. 유로 지하드의 등장

1. 유럽의 급진 이슬람주의 개관

가. 유럽의 급진 이슬람주의의 정의 및 살라피 지하디즘

1) 급진 이슬람주의의 정의

사전적 의미의 급진주의는 “사회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현재의 사회제도나 정치체제 관행 등을 급격하게 변혁하려는 주의”를 의미한다.²¹ 그러나 테러와 관련하여 급진주의를 다뤘던 기존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급진주의에 대한 정의가 하나의 합의된 개념으로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급진주의에 대한 개념 정의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급진주의는 “현재의 주류사회나 지배적인 정치사회적 담론에 반하는 신념이나 태도의 수용과 관련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²²

하지만 급진주의의 수용 그 자체가 반드시 문제적이거나 부정적이지는 않다.²³ 급진적 관점을 수용하였다 하여 반드시 폭력행위나 불법행위에 연루되지는 않으며, 어떠한 견해가 급진적인지는 그 사회의 역사적·사회적 맥락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21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5484300>, 검색일: 2019. 6. 5.

22 L. MacNair & R. Frank, "Voices against Extremism: A Case Study of a Community-Based CVE Counter-Narrative Campaign", *Journal for Deradicalization*, Vol. 10 (2017), pp. 147-174.

23 G. Davies, C. Neudecker, M. Ouellet, M. Bouchard & B. Ducol, "Toward a Framework Understanding of Online Programs for Countering Violent Extremism", *Journal for Deradicalization*, Vol. 6 (2016), pp. 51-86.

그러나 급진주의가 사회적 변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폭력을 승인 또는 정당화하거나 강요하는 신념과 태도로 연결될 때 급진주의는 우려의 대상이 된다.²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력을 용인 또는 행사하는 신념이나 태도는 ‘극단주의(extremism)’라 하며, 수단의 폭력성을 강조하기 위해 ‘폭력적 극단주의(violent extremism)’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극단주의는 하나의 이슈에 대한 급진적 시각이 폭력행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연루되고자 하는 의지로 발전해나가는 과정이다.²⁵ 폭력의 용인 및 직접적인 사용 여부가 급진주의와 극단주의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급진화된 개인이 결국 테러행위나 기타 폭력적 극단주의적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며, 급진주의가 폭력적 극단주의로 반드시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폭력 사용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상당수가 실제로 폭력행위에 연루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²⁶ 하지만 급진주의가 테러행위를 저지르게 하는 극단주의적 신념과 태도 개발의 우선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급진주의는 테러연구의 중요한 요소라 하겠다.

한편 급진주의는 다양한 사회적 운동이나 이데올로기와 연관될 수 있다. 종교, 좌·우파 이데올로기나 분리주의, 민족주의, 낙태 및 참정권 등 다양한 이슈가 급진주의와 관련될 수 있다. 이 연구보고서에서 주로 다

루고자 하는 급진주의는 이슬람교와 관련된 급진주의이다. 보다 정확히는 ‘살라피 지하디즘(Salafi-Jihadism)’과 관련된 급진 이슬람주의를 다루고자 한다. 또한 연구대상이 프랑스·영국·독일이라는 유럽국가이므로 다른 지역이 아닌 유럽의 급진 이슬람주의로 한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면에서 유럽의 급진 이슬람주의는 “유럽적 가치 체계의 중심에 있는 현대 민주적 문화의 주요 요소에 대한 거부”라는 정의를 차용한다.²⁷ 유럽적 가치는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 국제적으로 인식되는 인권, 양성평등과 신앙의 자유, 다양성에 대한 존중, 무종파적인 법원(法源)의 인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도으로써의 폭력 사용에 대한 반대를 포함한다.

2) 살라피 지하디즘 운동

‘살라피 지하디즘(Salafi Jihadism)’은 1960년대 이후 시작되어 1990년 중반부터 크게 확대된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지하드에 관심을 가진 살라피들의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이다.²⁸ 1990년대 이후 정치 이념으로서의 살라피즘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폭력을 지하드로 정당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²⁹ 살라피 지하디스트들은 이슬람에 대한 그들의 엄격한 해석에서 일탈한 무슬림들을 이단적 행위를 하는 ‘타크

24 Ibid.

25 A. Dalgaard-Neilson, “Promoting Exit from Violent Extremism: Themes and Approaches”, *Studies in Conflict & Terrorism*, Vol. 36 No. 2 (2013), pp. 99-115.

26 J. Khalil, “Radical Beliefs and Violent Actions Are Not Synonymous: How to Place the Key Disjuncture between Attitudes and Behaviours at the Heart of Our Research into Political Violence”, *Studies in Conflicts*, Vol. 37 No. 2 (2014), pp. 198-211. 한편 이러한 측면에서 급진주의의 개념 역시 인지적 차원과 행동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정의 및 측정해야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J. Khalil, *Ibid.* 참조.

27 Angel Rabasa & Cheryl Benar, *op cit.*, p. 3.

28 살라피 지하디즘 운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과 살라피 지하디즘으로의 발전은 논의 전개상 별칭의 내용으로 첨부하기로 한다.

29 Assaf Moghadam, “The Salafi-Jihad as a Religious Ideology”, *Combating Terrorism Center Sentinel*, Vol. 1 Issue. 3 (2008), pp. 1-3.

피르(takfir)'라고 부르는 것을 허용하며, 이단자에 대한 처벌은 죽음이
다. 살라피 지하디즘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이념이 된 와하비즘과 매
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나, 와하비즘보다 더 완고한 문자주의이자,
더욱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이념이라 할 수 있다.³⁰

살라프를 따르는 사람들인 살라피(Salafis)는 살라프를 무슬림이 자신
들의 믿음, 주해, 예배방식, 관습, 도덕, 신앙심 및 품행에서 이어받아야
할 영원히 변하지 않을 모델로 간주하고 하고 있다. 살라피들은 자신들
이 실천하는 이슬람은 '순수한 이슬람'으로 순나 해석의 최종적 권위를
가진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슬람 교의의 발전과 관련된 담론이나 논쟁을
포함하는 공론적인 철학을 거부한다. 살라피즘은 꾸란 구절과 하디스를
명명백백한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꾸란과 하디스를 '문자 그대로의 진
실'로 확신하고 있다. 이러한 살라피 운동은 살라피즘 독트린을 기본으
로 하는 순나 이슬람 내 하나의 운동이 된다.³¹

지하디 살라피즘이 기원을 두고 있는 급진적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은
근대 서구식 민족국가(Nation State)의 출현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배타적이고 전통수호적 측면이 강하며, 외세 배격 및 이슬
람의 부흥운동과 개혁운동을 창조적으로 수용하고, 지하드 개념으로 무
장해 이슬람의 원리적 정치를 구현해 보려는 정치 이념적 특성이 강하다
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급진적 사상은 이슬람 원리주의 조직들이 정
치세력화 과정에서 기존 정권과의 대립양상을 가져오는 이념적 기반으
로 작용했으며, 나아가 급진적 이슬람 원리주의 조직을 탄생하게 하는

30 정상률, "마크디시의 살라피즘과 IS의 살라피 지하디즘",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26집 1호 (2016), p. 162.

31 위의 글, p. 160.

사상적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일부 급진적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지하
드를 재해석하여 서구식 정치체제를 수용한 정권과 이슬람 세계를 위협
하는 외세에 대해 지하드를 선포하고 무장활동을 정당화하고자 시도하
였다.³²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 이후 서구를 중심으로 전개된 국제정치체제 에
서 이슬람 세계는 심각한 위기의 시대를 맞게 된다. 이슬람 국가의 정치
적 혼란, 세속 지도자의 무능한 리더십, 사회·경제적 갈등, 서구에 의해
유발된 세속적 위기 등으로 보다 급진화된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을 대안
으로 설정하게 되고, 살라피 지하디즘이 세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슬람
세계에 대한 외부적 위협에 대해 무슬림들은 지하드를 수행하게 된 것이
다.

나. 유럽의 급진 이슬람주의의 영향요인

1) 급진 이슬람주의의 영향요인

무슬림 개인이 급진 이슬람주의에 경도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의 정체성 문제³³, 개인이 소속된 사회에서

32 최재훈, "현대 이슬람원리주의의 정치세력화와 지하드론: 이집트 무슬림형제단과 급진주의 조직을 중심으로", 『지중
해지역연구』 제9권 제2호 (2007), pp. 161-162.

33 공동의 인종, 언어, 종교, 문화, 역사, 그리고 지리적인 근접성 등은 동료애를 생성하며, 특정한 집단에의 소속감을
만들어낸다. 그 결과 개인은 자신을 특정한 집단이나 공동체로 조직해낼 수 있으며, 이러한 공동체는 한 개인이 타인
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Michael T. Snarr & Neil D. Snarr, *Introducing Global
Issues*, (Lynne Rienner Publishers, 2005), 김계동·김영신 외 역, 『글로벌 이슈: 세계화의 도전과 대응』 (서울:
명인문화사, 2011). 근대사회에서 국민국가(nation State)가 등장함에 따라 한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
인 요소는 국적(nationality)이 되었다. David Bartram, Maritsa Poros & Pierre Monforte, *Key Concepts in*

의 주변화와 관련된 문제 및 인종적·사회적 소외 등이 개인의 급진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³⁴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영향요인들을 살펴보자면 급진 이슬람주의는 개인적 요인과 개인을 둘러싼 사회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나는 과정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과정은 개인적 요인에 해당하는 흡인 요인(pull factor)과 사회적 요인에 해당하는 배출 요인(push factor)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사회구조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에 해당하는 배출 요인을 살펴보자면, 소수집단의 주류사회 내 주변화 또는 주류사회로부터의 거부, 소수집단의 문화적 정체성 보존을 위한 자기 소외 및 배타성, 지역사회의 차별 및 인종차별의 경험 등이 배출 요인의 주요 요소이다.³⁵ 특정한 사회 내 소수자이기에 경험하게 되는 교육기회의 부족이나 인권침해, 상대적 박탈감도 배출 요인에 해당된다. 배출요인 가운데 지역사회의 차별 및 인종차별의 경우 다른 소수자 집단 중에서도 특히 무슬림 공동체나 흑인 공동체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지적된다.³⁶

그러나 사회구조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만으로는 개인이 급진 이슬람주의로 경도되는 급진화 과정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유럽국가에 거주하는 무슬림 이민자 모두가 급진주의에 경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적 요소를 중시하는 흡인 요인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흡인 요인은 취약한 개인을 급진 이슬람주의로 유인하는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흡인 요인은 배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적 불만(grief)을 급진 이슬람주의로 동원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따라서 주로 개인적 요소들이 흡인 요인에 해당된다. 소속감, 자아성취, 신분상승에 대한 욕구, 이를 자극하는 프로파간다, 가족 및 공동체 규범에 대한 반항, 문화적·종교적 진정성에 대한 동경, 주목받고 싶은 욕구 등을 제시할 수 있다.³⁷

특히 흡인 요인들은 견고하지 못한 자존감을 지닌 개인이 아무도 아닌 사람(nobody)이 되기보다는 여러 사람에게 주목받는 ‘누군가(somebody)’가 되는 것을 갈망하게 만들어 급진주의로 빠지게 하고, 나아가 결국 테러행위에 가담하도록 만든다.³⁸ 흡인 요인이 갖는 이러한 특성은 최근 서구권에서 급진주의에 기반한 테러가 주로 자생테러이며, 자생테러범들은 테러를 통해 주목받고자 하는 일종의 ‘방송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잘 나타나 있다.³⁹

급진화된 개인이 테러행위에 가담하는 동기는 이슬람 국가(Islamic State)의 건설과 같은 정치적·종교적 원인에서부터 빈곤, 사회적 불만, 호기심, 모험심 등 사회적·경제적 원인과 개인적 원인에 이르기까지 다

Migration, (London: SAGE, 2014); 이영민·외현욱 외 역, 『개념으로 읽는 국제이주와 다문화사회』 (서울: 푸른길, 2017).

34 Chris Angus, "Radicalisation and Violent Extremism: Causes and Responses", e-Brief (NSW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February 2016), pp. 1-23.

35 박보라·장석현, "극단주의에 관한 연구: 극단주의 테러범의 심리를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4권 제1호 (2018), pp. 73-74.

36 Hussein Tahir & Michele Grossman, *Community and Radicalisation: An Examination of Perceptions, Ideas, Beliefs and Solutions throughout Australia*, (Counter-Terrorism Coordination Unit, Victoria Police, 2013).

37 *Ibid.*

38 Angus, *op. cit.*

39 Mark S. Hamm & Ramon Spaaij, *The Age of Lone Wolf Terrorism*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7), pp. 91-100.

양한 것으로 분석되며⁴⁰, 여러 요소 가운데 사회적 상호작용과 집단역학, 대인관계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¹

그러나 급진 이슬람주의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경험적 연구결과, 여러 요인 가운데 급진주의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는 사회적 부정의 (social injustice)와 무슬림 공동체의 역할이 지적되었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경제적 주변인화와 사회적 소외가 급진 이슬람주의에 경도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으며⁴², 정치적 과정에서의 소수자 배제, 소수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차별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급진 이슬람주의로 인한 테러공격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이 언급되었다.⁴³

2) 소수자로서의 무슬림 공동체와 급진 이슬람주의의 관계

무슬림 공동체는 유럽국가에서 소수자 위치에 해당하는 무슬림 이민자가 급진 이슬람주의 경향을 띠게 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종종 지적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무슬림 공동체가 소수자로서 무슬림 이민자의 급진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하나의 집단으로 조직화된 무슬림 공동체가 의도했던 사회적·정

치적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할 경우 개인이 테러와 같은 급진적 전략에의 호소 여부를 살펴본 연구에서 무슬림 공동체가 하나의 집단으로 형성되었고, 그 공동체가 추진하는 운동이 정치적 실패·억압에 직면하게 될 경우 테러와 같은 폭력에 호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하지만 집단으로 조직된 무슬림 공동체가 폭력유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대테러 정책 및 급진 이슬람주의 대응, 특히 온건화(de-radicalization)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동시에 지적되고 있다.

둘째,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른 개인적·집단적 정체성의 훼손이 개인의 급진 이슬람주의화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 결과, 이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증거가 상당수 발견되었다. 또한 정체성 형성과 관련된 규범적·보편적·심리적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급진화 모델이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며, 급진화 모델을 후술하기로 한다.

셋째, 종교적·민족적 정체성의 성장이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에게 악용될 가능성 여부에 대한 연구 결과, 가설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증거가 상당수 발견되었다. 급진화는 사회적 과정이지만, '정체성' 또한 급진주의 경도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이 형성되고 확고해지는데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점이 지적되었다.

넷째, 제도화된 종교적·민족적(인종적) 편견과 차별이 불평등과 결합될 경우 급진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경험적 연구결과, 가설을 강력 지지하는 증거가 상당수 발견되었는데, 종교적·민족적 집단이 한 사회에서 경제적·사회적·정치적으로 배제될 경우 급진 이슬

40 박보라·장석현, 앞의 글, p. 74.

41 Marc Sageman, *Understanding Terror Network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4).

42 K. Proctor, "Looking for More than a Job: The Tenuous Link between Poverty and Extremism",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f The Economics-Countering Violent Extremism Nexus: Drivers and Solution on September 8, (Washington D.C.: Aspen Institute, 2015).

43 James A. Piazza, "Poverty, Minority Economic Discrimination, and Domestic Terrorism",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48, No. 3 (2012), pp. 339-353; Tamara Kharroub, "Understanding Violent Extremism: The Missing Link", *Arab Center Research Paper* (Arab Center Washington D.C., 2015).

람주의에 빠져들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⁴⁴

다. 급진 이슬람주의의 이론적 설명

급진 이슬람주의의 경험적인 특징들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등장하면서⁴⁵, 다양한 범죄학 이론을 적용하여 급진 이슬람주의를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⁴⁶ 범죄학의 이론적 설명이 개인적 차원과 사회구조적 차원으로 구분되어 발전되어 온 것과 마찬가지로, 급진 이슬람주의를 설명하는 범죄학적 이론 역시 개인적 차원과 사회구조적 차원으로 구분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보고서 또한 급진 이슬람주의의 영향요인으로 제시된 배출 요인과 흡인 요인처럼 사회구조적 원인과 개인적 원인에 해당하는 이론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사회해체이론

범죄학 이론에서 생태학적 접근은 사회해체이론과 사회생태이론이 대표적이다.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은 변화하는 도시환경과 도시의 생태학적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특정 지역의 높은 범

죄율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민자 집단이 전환적 근린 지역으로 몰려들게 되고, 해당 지역의 전통적인 문화의 반통합, 이민자 집단과 원주민(原住民) 집단 사이의 상이한 문화적 기준의 확산과 충돌 등이 그 지역의 비공식적 통제기제의 해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특히 전환적 근린 지역에 거주하는 이민자 1.5세대 및 2세대들이 새로운 문화에 동화되거나 부모 세대의 전통적 가치를 따라야 하는 선택의 상황에서 분리되어 나가며, 이러한 지역에서는 관습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일탈적인 가치 등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기에 가치충돌 또는 가치갈등은 지속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다.⁴⁷ 그리고 이러한 가치충돌은 이민자 1.5세대 및 2세대 등 청소년과 청년층의 주류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결과를 낳게 되며,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일탈적인 구성원을 충원하거나 일탈적인 전통을 확산하여 지지를 확보하려 한다. 이러한 설명은 서구 유럽국가의 자생테러 범의 상당수가 경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그리고 무슬림 이민자들의 거주지역이 경제적으로 낙후된 빈곤지역이며, 원주민인 주류사회 구성원들과 어느 정도 분리된 지역이라는 점은 무슬림 이민자 1.5세대 및 2세대들이 주류사회로부터 소외, 일탈적 생활양식 및 급진 이슬람주의에 경도되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44 WANA Institute, *Reconceptualizing the Drivers of Violent Extremism: An Agenda for Child & Youth Resilience* (2016).

45 Gary LaFree & Gary Ackerman, "The Empirical Study of Terrorism: Social and Legal Research", *Annual Review of Law and Social Science*, Vol. 5 (2009), pp. 347-374.

46 이러한 이론에는 하위문화이론, 합리적 선택이론, 범죄대체 및 전이이론, 사회해체이론, 일상활동이론, 억제이론, 발달이론 등이 있다.

47 Larry Siegel, *Criminology: Theories, Patterns and Typologies*, (Wadsworth, 2007); 이민식·김상원·박정선·신동준·윤옥경·이성식·황성현 譯, 『범죄학 이론과 유형』 (Cengage Learning, 2008).

2) 사회생태이론

사회생태이론(Social Ecological Theory)은 특정 지역의 범죄성을 유발하고, 이를 유인하는 생태학적 조건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사회생태이론에서는 공동체의 물리적 쇠락과 경제하락이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는데, 사회생태이론에서 설명하는 공동체의 물리적 쇠락이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공동체의 물리적 쇠락은 무질서, 소외, 교제의 단절, 범죄두려움 등을 포함하는데, 공동체의 물리적 쇠락은 주로 빈곤지역에서 발견된다. 빈곤은 노동자 계층과 중산층이 빠져나간 지역에서 공고해지고, 그 사회에서 가장 혜택받지 못한 사람만이 빈곤지역에 남겨진다. 이런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자 집단은 강한 충격을 받게 되며, 인종차별도 경험하게 된다. 만성적인 실업도 이러한 지역에서 쉽게 관찰된다. 실업은 가족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불안정해진 가족은 제한적인 기회를 포착하려는 수단으로 폭력행위를 장려하는 아동을 양산하게 된다.⁴⁸

따라서 사회생태이론의 설명에 따르자면 유럽의 무슬림 이민자 1.5세대와 2세대가 경험하는 만성적인 실업문제와 경제적 기회의 부족은 급진 이슬람주의로 경도될 수 있는 생태적 조건을 만들어내게 된다. 특히 인종차별과 관련된 범죄두려움은 소수자 집단으로써 이민자들이 자신들이 경험하는 사회문제를 주류사회로 건의할 수 있는 자원이 적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위 때문에 주류사회 구성원들보다 더 큰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요소들이 급진 이슬람주의로 개인을 유인하

게 된다는 것이다.

3) 하위문화이론

하위문화이론(Subcultural Theory)은 유사한 이념과 가치관을 가진 개인들이 상호필요성과 지지를 위해 결합하는 하위문화의 형성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특히 하위문화이론이 전제하는 일탈행위는 집단 내에서 발생한다는 점,⁴⁹ 하류계층 남성들이 주요 행위자라는 점은 유럽 국가에서 발생한 급진 이슬람주의 테러범들의 특징과 일치하는 바가 있다. 최근 유럽에서 발생한 급진 이슬람주의 테러는 주로 자생테러이자 외로운 늑대 테러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로운 늑대라 하더라도 최대 5-6명을 넘지 않는 소규모 집단 활동과 물리적 세계만이 아닌 온라인 상의 유사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 연대하는 등 완벽하게 '외로운 늑대'는 아니다. 이들은 테러 전 온라인상 선언문이나 성명서의 작성 및 배포, 유사한 신념을 가진 개인이나 조직들과 연대를 통해 집단역학의 영향을 받는 모습들이 관찰되며, 다른 범죄들과 마찬가지로 성별상 남성이 테러범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위문화이론을 대입하여 급진 이슬람주의를 설명하자면, 무슬림 이민자들은 소수자라는 지위상 사회적 성공을 위한 승인된 수단으로부터 소외되기 쉽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 자신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자신들만의 하위문화, 즉 살라피 지하디즘을 계발하게 된다. 또한 범죄적 하위

48 이민식 외, 앞의 글, pp. 219-220.

49 비행청소년의 예를 들자면 비행청소년들은 전형적으로 행동을 같이하고, 적어도 단독으로 행동할 경우라도 어느 정도 집단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가정이다.

문화가 지위·부·자긍심 등을 습득하는 수단으로써 폭력성과 범죄성을 강조하듯이⁵⁰, 하위문화로서 살라피 지하디즘 또한 이슬람 국가를 설립 하고, 순수 무슬림으로써의 자긍심 등을 확보하기 위해 폭력적 수단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4) 사회운동이론

사회운동이론(Social Movement Theory)은 억압된 환경적 조건⁵¹에서 발생하는 집단적 불만에 주목하여 발전되었다. 사회운동이론에서는 한 개인이 특정 사회운동에 가담하는 것은 압도적인 사회적 분위기 혹은 사회적 힘에 수동적으로 굴복하기 때문이라고 간주한다.⁵² 이때 사회적 분위기나 사회적 힘은 반드시 직접적인 무력이나 폭력은 아니며 '테러 내러티브' 등이 이러한 분위기에 해당된다.

사회운동이론에 주목할 필요는 하나의 운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구성원의 충원에 있다.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소모 되는 인력의 보충 및 해당 운동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새로운 구성원의 충원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잠재적 구성원으로써 예비집단의 확보, 구성원 충원을 위한 네트워크 조직 및 구성원의 동기 부여 등 집단이 갖는 목표⁵³는 급진 이슬람주의가 무슬림 이민자와 무슬림 공동체에서 지

50 이윤호, 『범죄학』 (서울, 박영사, 2015), pp. 247-248.

51 사회운동이론에서의 '억압된 환경적 조건'은 긴장이론(Strain theory)의 목표와 수단의 불일치를 의미하는 '긴장'과 유사한 개념이다.

52 박보라·장석현, 앞의 글, pp. 71-72.

53 Bert Klanderman & Dirik Oegema, "Potentials, Networks, Motivations and Barriers: Steps towards

속적으로 확산되는 배경이기 때문이다.

잠재적인 구성원 충원은 급진화 가능성이 높은 개인을 탐색한 후 급진 주의 집단 참여를 통한 획득 가능한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참여를 종용하는 유인책을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54, 55}

5) 프레임이론

프레임이론(Framing Theory)은 특정한 사회운동과 관련된 조직이 특정한 의미를 구성·생산·전파하는 과정에 관심을 가진다.⁵⁶ 프레임이론에서는 지지층의 관심사나 태도, 신념 등에 대한 메시지를 특정한 프레임으로 구성하여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과정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프레임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잠재적인 지지층의 반향을 가장 잘 이끌어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이 특정한 사회운동의 준거틀(frames of reference)을 수용하면서 점차 집단행동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⁵⁷ 결국 프레임은 잠재적인 지지자가 적극 동조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의 틀을 제공하고, 프레임링을 통해 해당 운동이 제시하는 '현실'이 얼마나 그 잠재적인 참여자들에게서 반향을 불러일으

Participation in Social Moveme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2 (1987), pp. 519-531.

54 Henry Brady, Kay Schlozman & Sidney Verba, "Prospecting for Participants: Rational Expectations and the Recruitment of Political Activist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3 (1999), pp. 53-168.

55 이러한 모집방식은 ISIS가 전투원을 모집하는 방식과 흡사하다. 자세한 내용은 "What is ISIS' Appeal to Young People?" (CNN, 2015. 2. 15) 참조.

56 A. Dalgaard-Nilsen, *Studying Violent Radicalization in Europe II: The Potential Contribution of Socio-psychological and Psychological Approaches* (Danis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2008).

57 박보라·장석현, 앞의 글, p. 72.

키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⁵⁸

사회운동이론과 프레이밍이론에 기초하여 급진 이슬람주의 조직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요소의 모델이 제시되었다. 이 모델은 급진 이슬람주의 및 폭력적 극단주의로 유입되는 개인들은 먼저 기존에 자신이 인식하던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관에 노출되며(인지적 개방 단계), 이후 자신이 추구하는 의미를 모색하기 위한 경로로 종교를 인식하고(종교적 추구 단계), 해당 조직의 내러티브와 정신이 타당성이 있다고 여기고(프레임 조정 단계), 마침내 재사회화 과정을 통해 집단에 유입(사회운동 주입단계)되는 것이다.⁵⁹

6) 사회심리이론

급진 이슬람주의의 전파에 있어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만큼, 공동체와 같은 집단의 역학에 대한 사회심리적 설명은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평범한 개인이 급진화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사회심리이론(Socio-psychological Theory)에서는 집단적 맥락이 급진주의를 계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⁶⁰ 한 개인의 의견이나 태도는 자신과 유사한 가치관과 견해를 가진 집단과 상호작용을 하며 보다 급진화되고, 개개인보다 집단이 보다 급진적인 의견과 태도를 보이는데 이를 집단 양극화(group polarization)라고 한다. 집단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집단

58 Dalgaard-Nielsen, *op. cit.*, 2008.

59 Quintan Wiktoriwicz, *Radical Islam Rising: Muslim Extremism in the West*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5).

60 박보라·장석현, 앞의 글, p. 72.

이 내리는 의사결정은 개인의 의사결정보다 보다 선입견과 편견에 기초하고 있고, 비합리적인 경향을 띠는 집단적 사고의 모습을 보인다. 집단적 사고에서는 집단 내부 구성원에게는 훨씬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집단 외부에게는 보다 부정적인 태도와 인식을 형성한다.

2. 유럽의 무슬림 인구 동향과 이민자 갈등

가. 이민의 개관과 동향

이민이란 국가의 경계를 넘는 인구이동을 말한다. 특정 국가의 인구수와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출생, 사망, 그리고 인구이동의 세 가지이다. 이때 인구이동 즉 이주(migration)는 거주지를 옮기는 현상인데, 통상적으로 행정구역상의 경계를 넘지 않는 경우는 '이사'라 부르며, 경계를 넘는 이동은 '이주'라고 부른다. 이동의 경계가 국경을 넘는 경우는 국제이주(international migration)이며, 국가간의 경계를 넘지 않는 이동은 국내이주(internal migration)라 한다. 따라서 이주는 국내이주와 국제이주를 모두 포괄하는 용어이며 이민은 국제이주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용어이다. 이동의 방향에 따라 발원지와 목적지가 있는데 국제이주의 경우에는 발원지(origin)를 송출국 또는 모국이라 하고, 목적지(destination)는 유입국 또는 수용국이라고 한다.⁶¹

61 이혜경, "이민과 이민정책의 개념", 『이민정책론』 (서울: 박영사, 2017), pp. 3-4.

나. 유럽의 무슬림 인구 동향

2019년 9월 21일 기준 전체 유럽 인구는 747,284,552명으로 유엔 경제사회국(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에서 집계하고 있으며, 전세계 인구의 약 9.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럽 내 가장 많은 인구 분포를 차지하는 국가는 러시아(145,872,256명)이지만, 연구대상에 해당하는 독일(83,517,045명), 영국(67,530,172명), 프랑스(65,129,728명)가 러시아에 이어 각각 2위, 3위, 4위에 이르고 있다. 전년 대비 독일의 이민자는 543,822명, 영국은 260,650명, 프랑스는 36,527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⁶²

프랑스의 전체 인구 가운데 정확한 종교별 인구 통계를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1872년 인구조사 때부터 특정인의 신앙과 인종적 기원을 밝히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⁶³ 그 결과 종교별 인구에 대한 공식 통계는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⁶⁴ 부모의 출신국가를 통해 무슬림 인구를 추정하게 된다. 2012년 이민자의 출신국가별 도출 수치를 통해 무슬

림 문화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구는 약 4,620,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퓨 리서치에 따르면 2016년 프랑스 내 무슬림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8.8%에 해당된다.

영국의 경우, 전체 인구는 67,530,172명이며, 종교적 분포로는 기독교 59.5%, 이슬람교 4.4%, 힌두교 1.3%, 기타(시크교, 유대교, 불교 등)로 구성되고 있다. 비록 영국은 기독교 인구가 무슬림 인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으나, 2011년 조사에 따르면 약 10만 명이 이슬람으로 개종하였으며, 이 중 여성이 66%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무슬림 인구가 2001-2009년 사이 他 종교에 비해 신자 수가 10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기독교의 고령화에 비해 이슬람은 신자의 평균 연령이 낮다는 특징이 있어 높은 출산율과 개정 그리고 가족 재결합 형태의 이민 증가 등을 고려한다면 지속적으로 무슬림 인구 수는 증가할 전망이다. 종파별로는 순니파(230만 명), 쉬아파(약 40만 명), 아흐마디파(약 1만 명) 순으로 순니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의 전체 무슬림 중 ⅓는 아시아 출신 파키스탄(38%)과 방글라데시(15%), 인도, 아랍, 아프리카 무슬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일의 전체 인구는 83,517,045명이며, 종교적 분포로는 로마 가톨릭 29%, 개신교 27%, 이슬람교 4.4%, 무교 또는 종교를 밝히지 않은 인구 36%로 구성되어 있다. 독일의 인구는 유럽연합국가 중 최대 규모이며, 이민자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약 1,650,000 명이다. 2009년 기준 독일 내무성은 독일 내 무슬림 인구는 전체 인구의 5.4%에 해당하는 430만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이 중 190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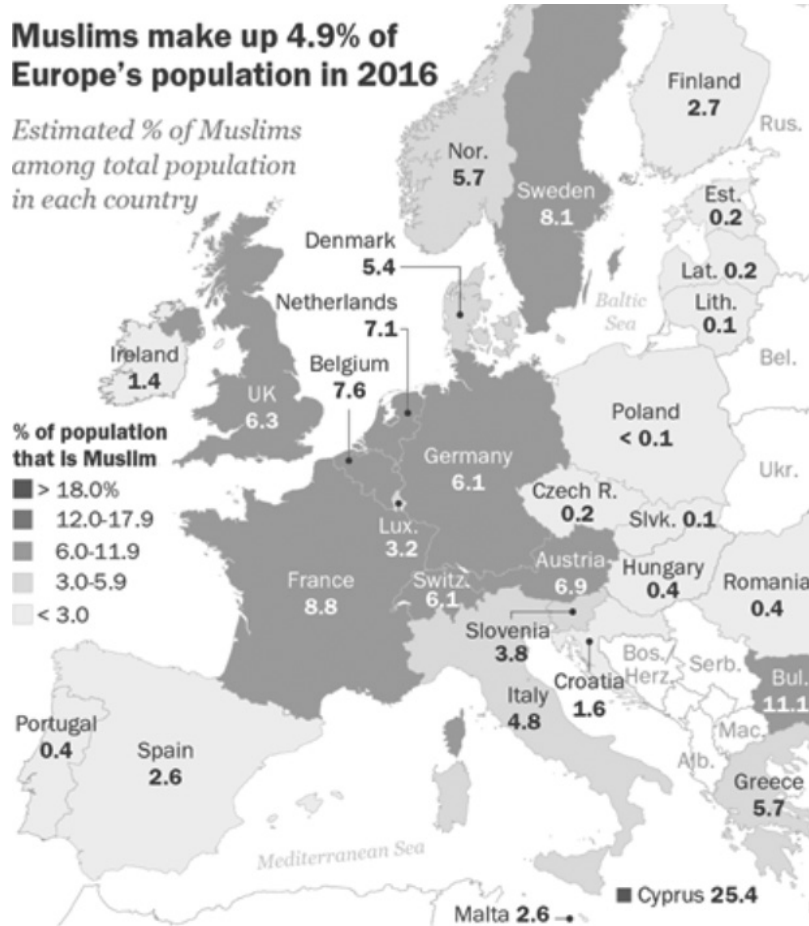
62 Worldometers (www.Worldometers.info) Elaboration of data by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9 Revision", (Medium-fertility variant).

63 한국이슬람학회, 『세계 속의 이슬람』 (청아출판사, 2018).

64 일반적으로 프랑스 내 무슬림 인구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슬람 문화권 출신 이민자들의 수를 인용한다. 그러나 프랑스의 해외 영토 등 외국 출신 '프랑스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자료를 이용하여 상이한 수치를 제시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부 인구학자들은 「국립통계청」에 여러 차례의 탄원을 제기하였고, 「국립통계청」은 1999년의 인구조사를 시행하면서 380,481명의 익명표본을 대상으로 부모의 출신국가를 알려주는 형태로 가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처음으로 3세대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이용할 수 있었다. 박단, 앞의 글, (2009).

은 독일 국적자로 추정하고 있었다.⁶⁵

〈그림 1〉 2016년 기준 유럽의 무슬림 인구 구성



출처: 퓨리서치센터 (<https://www.pewresearch.org/>) (2019. 9. 12. 검색)

65 한국이슬람학회, 앞의 글.

다. 유럽 국가의 무슬림 이민자 갈등과 사회통합의 문제

1990년대부터 급진화된 일부 무슬림들이 제시한 ‘안보문제’와 주류사회와 충돌하는 이민자 갈등 문제는 유럽국가들의 이민정책상 중요한 의제로 무슬림 이민자 사회통합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유럽 국가들은 국내적 차원에서 무슬림 이민자들을 자국의 가치 체계에 편입시켜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대우하고, 동시에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무슬림 이민자들을 일반 이민자와는 다른 대상으로 범주화하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무슬림 이민자의 사회통합이 정치적 의제로 부상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⁶⁶

1990년대 이후 유럽 내 무슬림 이민자와 유럽사회의 충돌은 점차 정치적 운동을 발전하여 유럽 각국의 소요사태, 정치적 이견 표출 뿐만 아니라 테러로 이어지는 양상이 보인다. 유럽 무슬림 이민자의 정치화는 탈냉전 이후 지난 사반세기 동안 나타난 중요한 국제정치 현상인 동시에 유럽의 국내정치 현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1990년대 이후 유럽 내 정치적 시위 및 반대 운동에서 이민자 문제는 점차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⁶⁷

무슬림 이민자 문제가 정치화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먼저 유럽 각국에서 무슬림 이민자가 단기간에 급속히 증가하였고, 이민자의 세대교체가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경우 1960년대 알제리 사

66 김용찬, “서유럽국가 이주민 통합거버넌스 연구: 영국과 프랑스의 무슬림 통합정책과 거버넌스”, 『평화학연구』 제12권 4호 (2011), pp. 27-50.

67 이러한 예는 2019년인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발견된다. 가장 최근 EU 선거와 관련하여 연합뉴스, “유럽의 삶의 방식 보호? EU 차기 집행위 새 직책명 논란”, (2019. 9. 18) 참조, 검색일: 2019. 10. 28.

태가 진정되면서 유입된 125만 명의 프랑스 국민과 일부 무슬림 이민자들의 후속 세대가 사회 전반에 등장한 시기가 1980년대 이후부터이다.⁶⁸ 영국 역시 식민지였던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이민자 중 무슬림 인구가 사회 전반에 정착하여 집단화를 시작한 시점도 1980년대이다. 독일의 경우, 1961년부터 시작된 터키계 이민자들이 정착하면서, 가족을 초청하고 하나의 이민 사회를 형성하여 후속세대가 사회전면에 나타나게 된 시기가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이다. 즉, 서유럽 주요 3개국 무슬림 이민자들은 60년대 독신 노동자로 혹은 식민지에서 입국하여, 가족을 초청하던지 형성하여 2세가 출생한 후, 그 2세가 청년층이 되는 시기가 80년대 중후반으로 일치하게 된 것이다.⁶⁹

두 번째는 무슬림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경제적 차별이나 배제였다. 1960년대와 70년대 유럽 국가에 도착한 무슬림 이민자들은 단기간 노동력 수요 공급을 목적으로 이주하였기에 주로 독신이었으며, 단기간 거주 후 본국귀환이 기대되었다. 그 결과 유럽국가들은 이주 노동자를 특정 직업이나 업무 및 지역에 한정하는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각국에서 완화된 이민정책으로 무슬림 이민 노동자들은 이주국가로의 정착과 동시에 시민권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으로는 사실상 분리·배제되는 상태였다. 즉, 도심이나 교외에 민족, 인종 혹은 종교에 의한 집단 거주지가 발달하게 되고, 그 결과 노동시장에서의 분절과 함께 사회복지 정책에서도 대부분

열악한 상태로 남게 된 것이다. 교육이나 취업에서의 불이익은 세대를 넘어 이어지게 되어, 사회 불안정의 한 요소가 된 것이다.⁷⁰

세 번째 요인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지구화와 그에 따른 국제정치적 요소이다. 냉전의 해체과정에서 국제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소련에 대한 포위였다. 1979년 발생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소련의 침략 및 점령에 반대하는 이슬람 저항운동을 미국 등 서구가 지원하면서 무슬림의 국제적 연대가 1980년대부터 진행되었다.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급진 이슬람주의 운동은 급격하게 국제화되었고, 탈레반, 알카에다, ISIS로 이어졌으며, 유럽 내 무슬림들과 네트워크화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살만 루시디 사건’과 같은 이슬람 가치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는 소박한 국제적 연대로부터 시작하였지만, 탈냉전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민족과 종교의식이 고양되면서 중동 및 중앙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 진행된 급진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과 연관되면서 과격화되었다.⁷¹

1980년대와 1990년대가 서구사회 내에서 무슬림 이민자의 후속 세대가 등장하는 시기였다면, 2000년대 유럽의 무슬림 인구는 난민의 유입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냉전 후 격화된 민족분쟁과 국가 해체 등으로 급증한 난민은 21세기 들어 더욱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이중 무슬림 난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서유럽 각국의 무슬림 이민자 인구는 급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무슬림 이민자에 대한 사회통합의 노력

68 문지영,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사이에서: 프랑스의 이민자 통합정책”, 『다문화사회연구』 제2권 1호 (2009), pp. 33-66.

69 한국이슬람학회, 『세계 속의 이슬람』 (청아출판사, 2018).

70 조희선, “영국, 프랑스, 독일 무슬림의 이주와 정착 및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 이주 무슬림과의 비교를 위하여”, 『한국중동학회논집』 제31권 제1호 (2010), pp. 105-149.

71 윤민우,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세력의 기원과 전략적 특성, 그리고 최근 동향에 관하여”, 한국위기관리재단 홈페이지 자료 (<http://www.kcms.or.kr/>).

은 처음에는 개별 국가의 이민정책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거듭되는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의 정치 행동과 국제적 네트워크로 이루어지는 무슬림 이민자들의 정치적 저항으로 유럽연합에서는 공동의 이민 및 망명정책을 마련하는 단계로까지 진행된다.⁷²

3. 유로 지하드의 등장

가. 지하드 개념의 재해석과 지하드의 글로벌화

‘지하드(jihad)’란 본래 “하나님(Allah)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정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슬람이 ‘신의 뜻에 복종한다’는 의미이고, 무슬림이 ‘개인과 집단 생활에 있어서 신의 뜻에 복종하고 따르는 사람’을 의미한다면, 지하드는 이러한 ‘종교적 계율 및 이슬람 율법을 지키려 노력하고, 설교·모범·정복을 통해서 신앙을 전파 및 신앙과 무슬림 영토를 방어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하드란 ‘무슬림이 그의 생애를 신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정의를 실행하며, 내외로부터 악을 추방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내하는 것’이다.⁷³

지하드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무슬림 공동체가 비무슬림들에게 지배

받고, 이슬람이 억압을 받을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20세기 아랍 지도자들과 이슬람 원리주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하드를 다양한 의미로 해석하게 된다.

이처럼 지하드에 대한 용어상 남용은 결국 하나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가능하게 만들면서 “한 사람의 테러범은 다른 이의 자유 투사다”라는 명제로 압축되게 된다.⁷⁴ 대표적으로 지하드 개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무자히딘(Mujihidin)」, 「알카에다」와 같은 급진 이슬람주의 단체에 의해 시도되었다. 급진 이슬람주의 단체에서는 이슬람을 위협하는 외부세력에 분투한다는 지하드관(觀)과 더불어 이슬람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아 지하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폭력과 테러도 불사하는 것으로 재해석되었다. 이를 통해 무슬림 사회의 내부영역을 뛰어넘어 무슬림 사회를 위협하는 외세와의 전쟁으로 지하드 개념은 확산되었다.⁷⁵ 지하드의 개념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이슬람 사회를 지키는 것으로 변모하였고, 중동·이슬람 지역과 관계된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급진성 및 과격성을 띄게 되었다. 이후 지하드 투쟁은 점차 글로벌화되는데, 이는 이슬람 세계를 위협하는 외부세력이 다양하다는 것과 지하드 투쟁의 확산을 의미한다⁷⁶.

1980년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대규모의 글로벌 지하드의 계기가 되었다. 아랍권 출신의 「무자히딘」이 지하드를 표방하면서 소련의 개입에 대항하여 아프간 전쟁에 참여하였고, 미국은 대소 전략의 일환으

72 김미성, "이주민문화의 충돌과 융합: 프랑스의 문화정책을 중심으로", 『유럽사회문화』 제2권 (2009), pp. 1-19; 이진영, "이민과 안보 및 안전", p. 236; 이해경·이진영·설동훈·정기선·이규용·윤인진·김현미·한건수, 『이민정책론』 (박영사, 2016).

73 조성권, "중동의 '알라의 전사들'", 『중동의 새로운 이해』 (1999), pp. 232-233.

74 Gus Martin, *Understanding Terrorism: Challenges, Perspectives and Issues*, (Sage, 2013).

75 최재훈, "급진 이슬람주의와 지하드의 글로벌화",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20권 제1호 (2010), p. 158.

76 위의 글, pp. 158-159.

로 아프간 전쟁에 참여한 이슬람 무장조직들을 지원하였다.⁷⁷

그러나 아프간 대소 항전의 승리 및 아프간 내전에서 지하드의 지속이라는 국제적 요인과 아랍 국가들에서 급진 이슬람주의 운동의 약화 및 쇠퇴라는 내부적 요인들이 결합함으로써 1990년대 초반 이후 살라피들의 투쟁전략과 방법은 변화하게 된다. 살라피의 관점에서 무슬림 세계 지도자들은 미국의 품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위선자이며, 공격의 화살은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동맹한 각국 정부들을 동시에 겨누어야 하게 되는 것이다. 즉 살라피들의 투쟁 전략은 무슬림 사회 내부에서의 지하드가 아니라 전세계적 규모에서의 글로벌 지하드로 변화하게 된다.⁷⁸

나. 유럽의 급진 이슬람주의와 유로 지하드

오늘날 유럽에서 이슬람의 주요 종파를 모두 찾아볼 수 있다. 유럽의 이슬람 종파적 다양성은 유럽 내 무슬림 인구의 출신 국가를 반영하는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의 무슬림 공동체와 이슬람 세계의 무슬림 공동체 사이의 차이점을 찾는다면, 유럽의 무슬림 공동체는 비이슬람권의 소수자라는데 있다. 따라서 이슬람 규범이 유럽 주류사회의 규범 및 사회적 관습과 항상 일치하지 않으며 때로는 갈등을 야기하는 사회적 맥락 내에서 이슬람 관습의 실행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갈등은 유럽 내 무슬림 공동체에 두 가지 평행적이고 상반되는

현상을 유발하였다. 하나는 자유주의적 무슬림들의 입장에서 현대 서구적 가치와 이슬람의 기본 원칙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유럽 이슬람”을 구성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다른 하나는 세속적인 서구권의 가치와 유럽 무슬림 인구의 대다수가 갖고 있는 전통적이고 문화적인 신념 모두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종교의 세계화와 더불어 서구사회가 점차 세속화되면서 종교와 교리 또한 교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경쟁해야 하는 종교적 시장의 자유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는 유럽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종교적 이데올로기와 관습을 등장하게 만들었다.⁷⁹

살라피즘은 유럽의 무슬림들이 스스로를 유럽 주류 사회 내 이방인으로 인식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설명과 이슬람의 기본 교리 확인을 통한 임파워먼트 강조를 통해 이러한 현상의 주요 수혜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유럽의 급진 이슬람주의는 사이드 꾸툼이 제시한 이집트 「무슬림 형제단」의 무장활동과 「알카에다」 조직원들이 제시한 와하비 운동의 폭력적인 분파라는 두 가지 이데올로기적 근거를 갖게 된다. 살라피즘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지하드 이데올로기의 핵심 요소 두 가지는 오염되지 않는 형태로 회귀함으로써 가능한 ‘이슬람의 정화’이며, 다른 하나는 신의 유일성을 뜻하는 ‘타우히드(tawhid)’이다. 특히 살라피들은 타우히드를 통해 오직 신만이 법원(法源)이 될 수 있기에 인간이나 인간이 제정한 법률은 신의 율법인 샤리아에 우선할 수도, 샤리아를 변경할 수 없다는 급진적 해석을 제공하여 민주주의는 결국 잘못된 종교라는 해석

77 Ahmed Rashid, *Taliban: Militant Islam, Oil and Fundamentalism in Central Asi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0), p. 129.

78 강봉구, “글로벌 지하드”. 『한국정치학회보』 제36권 4호 (2002), pp. 146-151.

79 Laurence Iannaccone, “Voodoo Economics? Reviewing the Rational Choice Approach to Religio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Vol. 34 No. 1 (1995), pp. 76-89.

을 제시한다.⁸⁰

또한 살라피들은 자유(freedom)가 신이 금지한 것들을 허용할 수 있으며, 서구의 자유 및 세속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신이 명령한 일이 아닌 것을 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를 거부하기도 한다. 자유가 음탕한 행위를 문화적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살라피들은 굿 거버넌스를 합법적 권리로서의 자유(liberty) 대신에 정의(justice)와 연결짓게 된다. 또한 오직 신만이 승배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신에 대한 직접적인 승배가 아닌 종교적 상징물과 같은 매개물을 대상으로 한 예배는 모두 우상승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살라피의 관점에서 전통적 무슬림과 수피 무슬림 및 시아 무슬림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가 비롯된다.

유럽의 급진 이슬람주의를 촉진하는 요소 중 하나는 보편적인 무슬림 공동체인 움마(umma)의 통합적인 관점(unifying vision)이다. 움마는 종교적 정통성을 대표하는 목소리이자 이슬람의 선봉에 서기를 주장하는 급진 이슬람주의 및 급진주의 조직원 모집을 촉진한다. 또한 움마는 온건주의자들을 무슬림에 맞서는 불신자라는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급진주의자들에게 강력하게 반대할 수 없도록 작용한다. 또한 유럽의 무슬림 이민자 중 청년층에게 움마의 확인은 자신들이 멀리 분리되어 버린 모국의 전통 문화와 자신들을 배척한다고 여기는 서구 문화에 대한 대안적 정체성을 제공하게 된다.⁸¹ 살라피 조직 대다수가 가장 공통되게

추구하는 목표인 칼리프 국가(caliphate)가 이와 연관된다.⁸²

다. 무슬림 이민자의 정치운동과 테러의 결합

유럽국가 내 무슬림 이민자들의 정치적 저항은 정치참여의 한 형태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곧 국제적 네트워크에 의해 급진 이슬람주의적 테러와 결합되면서 그 양상을 달리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급진 이슬람주의의 영향을 받은 '외로운 늑대' 유형의 자생적 무슬림 이민자 테러범도 나타나고 있다. 즉 20세기에는 주로 인종차별에 대한 무질서적 저항운동의 성격이 강하였다면, 21세기 들어 좀 더 조직화된 테러의 양상을 띠게 되었고, 그 테러는 국제화된 것이다. 영국에서는 1980년과 1981년, 1985년과 1986년, 1991년 등에 주로 런던 남부의 흑인 밀집 지역에서 발생한 폭동이 대표적 인종 관련 폭동이다.⁸³

프랑스에서의 상황 역시 다르지 않았다. 중요한 점은 이슬람이라는 종교보다는 이민자에 대한 차별이 인종적 편견과 결합하여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 시기에는 오히려 이민자에 대한 극우세력의 테러와 방화 등이 문제가 되었다.⁸⁴ 통일된 독일에서는 통일의 후유증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큰 동독 지역에서 이민자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였다.⁸⁵

82 Angel Rabasa & Cheryl Benard, *Eurojihad: Patterns of Islamist Radicalization and Terrorism in Europe* (RAND Corporation, 2015), pp. 23-31.

83 정희라, "영국: '자유방임 이민국'에서 '제로 이민국'으로", 『현대서양사회』 (2011), pp. 63-64.

84 김승민, "프랑스 이민통합의 실패 원인: 프랑스사회 책임 혹은 이민자책임", 『유럽연구』 제31권 1호 (2013), pp. 211-237.

85 김성진, "유럽의 이주갈등: 경제·사회정책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이론』 47호 (2015), pp. 193-221.

80 이라크 대선에 반대한 요르단 출신 테러범 আবু 무사브 알 자르카위(Abu Musab al-Zarqawi)의 주장.

81 Oliver Roy, *Globalized Islam: The Search for a New Ummah*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4).

그러나 늘어난 무슬림 인구와 쏠지구화로 인한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 국제적이고 경쟁적으로 이루어진 이슬람 선교가 결합하면서, 서구에서의 무슬림 이민자 저항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소련에서 독립한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 이슬람 국가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 및 터키 등의 선교 지원과 서구에 의한 아프가니스탄 전쟁 및 이라크 전쟁은 중앙아시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 이르는 이슬람 벨트에서 이슬람을 급속하게 재확산시켰다.⁸⁶ 또한 난민의 대거 유입은 난민의 출신국가와 민족 무슬림과 서구 거주 무슬림을 네트워크화시키면서, 무슬림의 정치운동은 새로운 양상에 접어든 것이다. 모국에서의 문제가 거주국 무슬림 이민자에게 확산되거나, 거주국에서 경험하는 차별과 배제에 불만을 가진 무슬림 이민자가 폭력화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테러와 무슬림 이민자가 결합되는 양상이 점차 확대되는 것이다.⁸⁷ 21세기 들어 무슬림 이민자와 그와 연관된 테러는 유럽 각국에서 발생하면서 확산되었다. 특히 이슬람이란 종교에 대한 차별과 무슬림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이 서구사회 내에서 문화충돌과 결합되면서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86 박재영, "유럽 다문화사회의 문화충돌: 영국·프랑스·독일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1호 (2008), pp. 107-138.

87 이진영, 앞의 글, p. 236.

III

프랑스의 이민자 갈등과 급진 이슬람주의

1. 라이시테 원칙과 무슬림 사회통합의 문제
2. 프랑스의 급진 이슬람주의 대응과 대테러 정책

1. 라이시테 원칙과 무슬림 사회통합의 문제

가. 프랑스의 무슬림 이민의 역사와 공동체 형성

프랑스가 이민의 나라가 된 것은 불과 1세기 전부터이다. 1860년대 당시 북아프리카 알제리를 비롯하여 남미 대륙에서도 식민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에도 프랑스는 이민자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구대륙의 식민지나 신대륙으로 이민자를 보내던 국가였다. 그러나 1880년대 중반이 되면서 상황은 달라진다. 1886년 프랑스의 외국인 수는 전체 인구의 3%에 해당하는 1,127,000명이 된다.⁸⁸

프랑스가 이민자를 받아들이게 된 배경에는 19세기 말 프랑스의 인구 문제가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근대화 과정에서 프랑스 주변국가의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여 무려 3배 가깝게 증가한 국가도 있었으나, 프랑스의 인구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해진 것이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많은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어 국가 재건을 위해 인근 후발 유럽국가로부터 상당한 수의 노동력을 유입하게 된다.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은 물론 폴란드에서도 노동인구를 받아들였던 것이다.⁸⁹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근 유럽국가로부터 노동인구를 수입하

88 Patrick Weil, *La République et Sa Diversité: Migrations, Intégration, Discrimination* (Seuil: 2005); 김현주, "프랑스의 북아프리카 출신 대상 이민·사회통합정책의 위기와 테러 환경", 『한국아프리카학회지』 제53집 (2018), p. 126 재인용.

89 박단, "프랑스: 공화국과 무슬림 이민자", 『현대 서양사회와 이주민: 갈등과 통합 사이에서』 (서울: 한성대학교 출판부, 2009), p. 19.

는 것은 어려워지면서 부족한 노동력은 프랑스의 舊·現 식민지 국가들로부터 수입하게 된다. 프랑스는 부족한 노동력을 여전히 식민 지배하에 있었던 알제리에서 메우려 했다. 1830년에 프랑스의 식민지가 된 알제리에서 175,000명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식민지 모국인 프랑스를 위해 싸웠으며, 이 중 35,000명이 사망했다. 이는 모로코, 튀니지, 인도차이나 등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높은 참전자 수와 사망률이다.⁹⁰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프랑스는 식민지에서 파견된 군인 및 노동자 약 250,000명을 '자신들의 나라'로 환국시켰기 때문에 프랑스에 남아 있는 알제리인의 수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알제리를 포함한 북아프리카의 군인들이 프랑스 해방에 상당히 공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후 프랑스에 남아 있던 무슬림의 수는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1946년 기준으로 프랑스에 거주하는 이민자 가운데 유럽 출신이 88.7%, 아프리카 출신이 3.1%였으며, 그 가운데 알제리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3%에 불과하였다.⁹¹

그러나 1947년 「마셜 플랜」으로 유럽 경제가 급격하게 발전하는 동안 노동인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많은 수의 알제리인을 비롯한 북아프리카인들이 프랑스로 이주하게 되었다. 종전 후 알제리인들은 프랑스와 알제리 사이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고, 프랑스에 거주하는 알

제리인들은 동화에 의해 프랑스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시민권 신청이 필요하지 않았다.⁹² 이러한 추세는 경제위기 직전까지 지속되었으며,⁹³ 독신자로 이주했던 무슬림 이민자들이 가정을 가지고 2세·3세가 태어나게 되면서 프랑스의 사회도 변화하게 된다. 모스크의 수가 증가하였고, 자연스럽게 이슬람은 프랑스의 제2의 종교가 되었다.

무슬림 이민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프랑스 사회는 이슬람을 점차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프랑스는 알제리의 식민화를 통해 무슬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져 왔고, 알제리 독립전쟁(1954~1962) 동안 「알제리민족해방전선(Front de Libération Nationale, FLN)」의 테러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면서 이슬람과 무슬림 이민자들에 대한 인식은 악화되었다.⁹⁴ 테러용 무기를 감추는데 사용된 히잡은 이후 이슬람 폭력의 상징이 되었다.⁹⁵ 알제리인만이 프랑스의 무슬림 이민자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 알제리인을 제외하고 무슬림으로 간주할 수 있는 노동인구를 살펴보면 모로코인 260,000명, 튀니지인 140,000명, 터키인 50,000명, 그리고 유고슬라비아인 80,000명이 있었다. 이는 프랑스에서 무슬림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이민자가 1974년 기준 이민자 전

90 모로코인은 40,000명이 참전하여 12,000명이 사망하였으며, 튀니지인은 80,000명이 참전, 21,000명이 사망하였다. 인도차이나인은 49,000명이 참전하여 1,600명이 사망하였다.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First World War, https://encyclopedia.1914-1918-online.net/article/colonial_military_participation_in_europe_africa, 검색일: 2019. 9. 11.

91 한국이슬람학회, 『세계 속의 이슬람』(2018), p. 785.

92 Dominique Maillard, "The Muslims in France and the French Model of Integration", *Mediterranean Quarterly*, Vol. 16 No. 1 (2005), p. 62.

93 김현주, 앞의 글, p. 126.

94 한국이슬람학회, 앞의 글, pp. 784-786.

95 이와 관련 Shoshana Magnet & Corinne Lysandra Mason, "Of Trojan Horses and Terrorist Representations: Mom Bombs, Cross-Dressing Terrorists, and Queer Orientalisms", *Canadian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39 No. 2 (2014), pp. 193-209 및 *Washington Times*, "EDITORIAL: Terrorists Hiding in Hijabs", (2010. 11. 17) 참조.

체의 86%를 차지함을 나타낸다.⁹⁶ 1975년 프랑스 이민자 수는 알제리인 710,000명을 포함하여 3,442,000명으로 당시 프랑스 전체 인구의 6.2%에 해당된다.⁹⁷

프랑스의 무슬림 인구 증가는 당시 프랑스 경제의 성장, 프랑스 청년층의 학업기간 연장에 따른 노동력 수요 증가, 약 500,000명의 남성노동력을 마비시킨 1956년의 알제리 전쟁, 노동력 수요 증대로 인해 불법 입국자를 묵인한 프랑스 당국, 여성 및 가족 이민의 비약적 증가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⁹⁸ 이러한 추세는 제4차 중동전쟁(1973~1974)으로 인한 오일쇼크에서 비롯된 경제위기가 오기 전까지 지속된다.

1974년 7월 3일 프랑스 정부는 새로운 노동이민자의 입국을 금지한다. 프랑스 정부는 유럽공동체 소속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에게는 프랑스 내 노동허가를 발급해주지 않았다. 한편 기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1만 프랑의 귀국 보조금이 제시되었으나, 이 제안을 받아들인 외국인들은 프랑스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대부분 포르투갈인 또는 스페인인이었다.⁹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프랑스 내 이민자 수는 상당 기간 감소하여 안정화될 수 있었다.¹⁰⁰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알제리 출신 이민자는 프랑스 정부의 이주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이민 2세대의 수가 늘어

났기 때문이다. 1980년대 약 40만 명에 달하는 프랑스 국적을 가진 알제리 출신 프랑스인들 가운데 3분의 2는 프랑스에서 태어난 이민 2세대들이다.¹⁰¹ 그리고 상대적으로 관용적인 국적법¹⁰², 특히 1998년 사회당 의원이었던 엘리자베스 기구(Elisabeth Guigou)가 발의한 「기구법(La Loi Guigou)」을 통해 무슬림 이민자의 프랑스 국적 취득이 용이해졌기 때문이다.¹⁰³

2012년 기준 프랑스 이민자 중 43.2%가 아프리카 출신으로 알제리인이 13.1%, 모로코인이 12.1%, 튀니지인이 4.4%를, 그 외 아프리카 출신이 13.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무슬림 이민자들과 그 2세대들이 높은 실업율과 빈곤 지역 거주 등 열악한 주거환경, 주류사회와 경험하는 문화적 충돌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데 있다. 무슬림 이민자들은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 문제와 프랑스인으로의 동화 문제를 고민하였고, 주류사회에서도 무슬림 이민자들이 프랑스 사회에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고 믿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이러한 가운데 등장한 ‘히잡 논쟁’과 같은 프랑스 내 무슬림 이민자 갈등은 무슬림 이민자 문제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96 Ralph Schor, "L'immigration en France au XX^e siècle: Tendance d'ensemble", *Historiens and Géographes*, No 383 (2003), p. 247, 박단, 앞의 글, p. 25 재인용.

97 Weil, *op cit.*; 김현주, 앞의 글, p. 126 재인용.

98 Schor, *op. cit.*, p. 247.

99 이 제안은 북아프리카 마그레브인들의 출국 유도가 주요 목적이었다.

100 이 조치의 시행에 따라 프랑스의 이민자 수는 1975년 3,442,000명에서 1982년 3,680,000명, 1990년 3,580,000명, 1999년에 이르러 3,263,000명으로 감소하게 된다. *Ibid.*

101 Benjamin Sotra et Emile Temime, *Immigrances* (Fayard, 2007). 박단, 앞의 글에서 재인용.

102 1945년부터 1990년대까지의 무슬림 이민자와 프랑스 정치 문제를 연관하여 프랑스 국적법 문화를 고찰한 연구는 한명숙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한명숙, "무슬림 공동체의 현황과 국적법", 『인문학연구』, Vol.10 (2006); "프랑스 국적법 개정과 북아프리카 이민자 문제, 1986-1993", 『프랑스사연구』, 제20호 (2009); "1980년대 프랑스 국적법 논쟁을 통해서 본 무슬림 이민자 문제",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18집 3호 (2008) 참조.

103 박단, "탈식민화와 '새로운 프랑스 국민': 알제리 전쟁 전후 알제리인의 프랑스 유입과 국적법 변화", 『중앙사론』, 46집 (2017).

나. 프랑스의 히잡 착용 논쟁과 이민자 갈등

프랑스에서 무슬림 이민자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북아프리카 마그레브 출신 이민자들의 2세가 20대가 되는 시기인 1980년대 초반이다. 1980년대에 대두된 이민자 문제는 유럽 자본주의의 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1990년대 및 2000년대 들어서 장기화되고 심화되었다.¹⁰⁴ 북아프리카 마그레브 출신 무슬림 이민자 집단의 통합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민자 문제가 이민자 2세·3세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2003년 12월 자크 시라크(Jacques Chirac) 프랑스 대통령이 '종교적 상징물을 공립학교 내에서 드러내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찬성하고, 이듬해 2월과 3월에 각각 프랑스 하원과 상원에서 여야 의원 거의 대다수의 찬성으로 채택되면서 「라이시테 원칙에 준거한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종교적 외양을 드러내는 옷이나 상징물의 착용에 대한 2004년 3월 15일 법(이하 2004년법)」이 제정되었다. 「2004년법」의 제정을 통해 1989년 이후 지속되어 온 무슬림 여학생의 학교 내 히잡 착용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되었다. 프랑스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한 가장 유력한 근거는 프랑스 공화국의 엄격한 정교분리원칙인 '라이시테(laïcité)' 원칙이다.¹⁰⁵

자유주의적 개념에서 비롯된 라이시테 원칙은 "종교집단의 압력에 대해서 국가가 개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바로 보편적인 개인의 권한을 집단적인 소속감보다 앞장서서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사적인 영역에서는 종교에 대한 유연한 입장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비종교성의 원칙이 신앙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한다. 종교의 자유를 유지하는 동시에 비종교성을 요구하는 모순적인 문제점을 상쇄하기 위하여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해주는 사적인 영역과 공적 영역에서의 비종교성을 철저히 구분한다.¹⁰⁶

이러한 라이시테 원칙에 근거를 둔 「2004년법」은 무슬림 이민자 2세들이 본격적으로 출현하면서 부각된 종교적·문화적 정체성 문제인 '히잡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1989년 10월 파리 근교의 한 학교에서 세 명의 모로코계 무슬림 여학생이 수업 시간에 히잡을 벗는 것을 거부하여 학교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그 후 일주일 동안 거의 모든 전국지에서 세 소녀의 퇴학 사건이 다루어졌고, 이는 무슬림 이민자에 대하여 대규모로 이루어진 프랑스인들의 최초의 공식 반응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¹⁰⁷

비록 사건 발생 후 약 일주일만 지나 세 여학생의 가족과 학교 당국 사이에 ① 세 여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히잡을 착용할 수 있으며, ② 심지어 학교 운동장이나 복도에서도 착용이 가능하나, ③ 교실에서는 히잡을 어깨 위에 걸쳐놓아야 한다는 내용의 협상이 이루어지며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프랑스 언론이 교내 히잡 착용 논란이 다른 도시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슬림 이민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는 점을 보도하면서 이 문제를 확대·재생산하기 시작하였다.

104 김현주, 앞의 글, p. 127.

105 한국이슬람학회, 앞의 글, p. 787.

106 박선희, "프랑스 안의 무슬림: 공화주의와 문화갈등", 『국제관계연구』 제20권 제1호 (2015), p. 230.

107 박단, "프랑스: 히잡사건", 『현대 서양사회와 이주민: 갈등과 통합 사이에서』 (서울: 한성대학교 출판부, 2009), p. 173.

나아가 언론은 학교에서의 히잡 착용과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대해서 보도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리고 사람들이 무슬림 여성의 히잡 착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것을 촉구하기까지 하였다.¹⁰⁸

결국 1989년의 히잡 사건은 프랑스 사회에 이슬람과 무슬림 이민자를 명확히 각인시키는 한편, 상당 수의 프랑스인들에게 이슬람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왔다. 게다가 히잡 사건은 무슬림 이민자 2세들의 정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교육기관으로써 학교의 능력, 나아가 프랑스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결과적으로 라이시테 원칙을 통해 추구하는 비종교적 중립성과 사적인 신앙생활의 자유 사이의 경계를 국가가 명확하게 구분하여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여학생들의 히잡 착용 문제에 대하여 프랑스의 최고행정재판소가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평가와 처리를 권고하였기 때문이다.¹⁰⁹

히잡 사건은 1989년에 이어 1994년과 2003년에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연속해서 제기되었다.¹¹⁰ 1989년의 히잡 사건과 동일하게 1994년에도 학교는 여전히 라이시테 원칙의 분쟁이 일어나는 장소였다. 차이점이 있다면, 1994년의 히잡 사건은 히잡 착용 그 자체보다는 무슬림의 지배적 특징과 함께 국제적 사건들의 영향을 더 받았다.¹¹¹ 한편 다시 한 번 히잡 사건이 대두된 2003년에는 히잡 착용과 관련된 새로운 공적 논쟁

이 제기되었는데, 이전보다 논쟁은 더욱 격렬하고 더욱 분리적이 되었다. 라이시테 원칙과 관련된 문제는 더 이상 학교만 국한되지 않았고, 병원과 다른 공적인 장소와도 연관되었다. 게다가 9/11 테러 이후 새로운 요인이 히잡 논쟁에 개입하게 된다. 히잡은 이른바 ‘문명충돌’이라는 헌팅턴 테제의 구성요소 중 하나가 된 것이다.¹¹²

다. 프랑스의 무슬림 이민자 소요사태와 이민자 갈등

프랑스 혁명 정신에 반하는 동시에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불러 일으키는 사건은 프랑스 내 히잡 사건으로 그치지 않았다.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던 북아프리카 마그레브 출신의 무슬림 이민자가 전체 외국인의 42.7%(2004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실업률과 차별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민문제의 핵심으로 대두되게 된다. 이에 따라 북아프리카 출신 제2세대 청년층은 무슬림 공동체들과 함께 정치적 압력그룹을 형성하고 발전시켜 왔다. 무슬림 이민자들이 프랑스 사회 내에서 소수자로서 겪는 차별과 배제 철폐, 높은 실업률 등에 대한 문제 제기는 1980년대부터 꾸준히 대두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특히 프랑스 주요 도시에서의 소요사태 및 폭동으로까지 확대된다.

2005년 10월 27일 프랑스 파리 북동쪽 교외도시 소요사태는 프랑스 전역으로 확대되어 3주 동안 10,000여 대의 차량이 불타는 유례없는 폭

108 Bronwyn Winter, *Hijab and the Republic: Uncovering the French Headscarf Debate* (Syracuse University Press, 2008). 박단, 앞의 글에서 재인용.

109 *Ibid.*, pp. 118-119. 박단, 앞의 글에서 재인용.

110 Leveau et Mohsen-Finan, *Musulmans de France et d'Europe* (CEMOTI, 2005), p. 118.

111 *Ibid.*, 119.

112 Jean-Pierre Dubois et Driss El Yazami, "Hijab, Liberté et Laïcité", in Charlotte Nordmann, *Le Foulard Islamique en Questions* (Editions Amsterdam, 2004), pp. 142-150. 비단 프랑스 뿐만 아니라 히잡 착용은 유럽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논쟁이 제기된 의제였다. 이와 관련 2010 OSCE Supplementary Human Dimension Meeting Agenda 참조.

동으로 나타났다.¹¹³ 2005년의 소요사태는 경찰검문을 피해 달아나던 이민자 청소년 세 명이 잠시 숨어있던 변압기 설치지역에서 감전사고를 당해 15세, 17세 두 명의 청소년이 사망한 데서 시작되었다.¹¹⁴ 사건 발생 이후 분노한 유족들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던 무슬림 청년층이 경찰과 대치하는 장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사망한 두 소년의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그러나 장례식 익일인 2005년 10월 30일 별다른 폭력사태가 없었던 상황에서 당시 내무장관인 사르코지(Nicola Sarkozy)는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을 선언한다.¹¹⁵ 그리고 경찰은 추모 인파가 결집한 이슬람 사원을 향해 최루탄을 쏘았으며, 당시 대통령이었던 시라크(Jacques Chirac) 또한 이 사건에 대하여 최초로 언급할 당시 질서회복을 먼저 이야기하였다.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근본적인 원인 해결 대신 프랑스 정부가 취한 조치는 결국 무슬림 이민자들을 자극하여 사태를 악화시키게 되었다.¹¹⁶

2006년 3월 24일 파리 외곽 도시 생드니에서 발생한 무슬림 이민자들의 폭동은 프랑스 소요 사태의 새로운 국면을 의미하였다. 학생과 노동자에 이어 해당 지역의 갱까지 폭동에 가세하였다. 당시 언론은 2005년 소요사태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치안이 다시 불안정해진데

다 갱들이 합류했다는 점에서 소요사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결국 우려대로 폭력사태가 발생하자 경찰은 상업지역 전체를 폐쇄했으나, 상업지역 내에 있던 상인과 행인들은 치안이 부재한 상태에서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야 했다. 뒤늦게 경찰이 현장에 투입되었으나, 폭도들의 강력한 저항을 진압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¹¹⁷

프랑스 무슬림 이민자들에 의한 소요사태는 생드니 사태로 끝난 것이 아니다. 2007년 11월 25일 프랑스 파리 북부의 빌리에르벨에서도 무슬림 이민자 폭동이 시작되었으며, 2년 전 생드니 폭동보다 더욱 격렬했다. 학교와 도서관 및 관공서와 상점 등이 방화피해를 입었으며, 폭도들은 현장에 취재차 있던 기자 두 명에게 폭행을 가하고 카메라를 절취하였다. 폭동에 참가한 무슬림 이민자 청년층들은 경찰에게 돌, 화염병, 사냥용 총 등을 이용하여 경찰에게 공격을 가했다.¹¹⁸

소요가 번지면서 빌리에르벨 이외 5곳의 방리외(banlieu)¹¹⁹에서도 폭력사건과 방화가 발생하였다. 이번 소요사태의 발단은 무슬림 이민자 청년 2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경찰차와 충돌, 사망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¹²⁰ 경찰은 “이번 소요사태가 2005년의 소요사태보다 훨씬 더 격렬하다”고 발표하였으며, 폭동자들을 ‘도시 게릴라’로 규정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사태 진압에 대한 강경 방침에 따라 진원지인 북부 빌리에르벨과 인근 교외 지역 등에 1,000명 이상의 경찰이 투입되었다. 이뿐만 아

113 YTN, “파리, 저소득층 청년 소요사태”, (2005. 11. 01.), 검색일: 2019. 9. 23.

114 박단, 『프랑스의 문화전쟁 - 공화국과 이슬람』 (책세상, 2005).

115 형사사법기관의 ‘무관용 경찰활동’은 중대한 범죄 뿐만 아니라 사소한 무질서 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집행을 통해 엄격한 법집사의 확립을 목표로 한다. 프랑스의 경찰제도에서 국립경찰은 내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게 된다.

116 박재영, “유럽 다문화사회의 문화충돌: 영국·프랑스·독일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제1호 (2008), pp. 117-118.

117 『경향신문』, “佛 총파업 ‘마비’...500만명 참여”, (2006. 3. 28).

118 『한겨레』, “불타는 파리...프 ‘이민자 폭동’ 재연 우려”, (2007. 11. 27).

119 사전적 의미로는 교외지역이나, 이민자가 밀집된 도시 외곽 소외지역의 의미로 사용된다.

120 『국민일보』, “파리 폭동, 2년전보다 격렬”... 차량·관공서 방화” (2007. 11. 28).

나라 경찰력 외에도 특수훈련을 받은 병력이 투입됐고, 헬리콥터까지 동원되기도 했다.¹²¹

프랑스 무슬림 이민자들의 소요사태가 폭력적인 양상으로 전개된 배경에는 프랑스 정부의 극단적인 대응방식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당시 프랑스 정부의 태도는 1990년대 말 이후 이른바 “치안담론’을 중심으로 한 이민문제에 대한 정치화”의 연장선상에서 찾을 수 있다. 치안담론을 중심으로 한 이민문제의 정치화는 무슬림 청년층의 높은 실업율, 제한된 교육기회, 사회적 차별과 편견, 빈곤지역 거주 등 열악한 주거환경 등과 같은 이민자 문제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이민자 문제를 이용하고, 또 이민자에 의한 치안위협이 제기됨에 따라 희생양으로 이민자 집단을 이용하는 양상을 의미한다.¹²²

프랑스의 경우 북아프리카 마그레브 출신 또는 무슬림 이민자들은 이른바 위험한 집단의 전형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이들을 범죄집단으로 취급하며 통제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분법적 표상을 사용했다. 즉 ‘온건한 이슬람’ 對 ‘급진적 이슬람’, ‘모범집단’ 對 ‘문제집단’이라는 구분이다.

당시 프랑스 정부는 연이어 발생한 무슬림 이민자 소요사태에 대해 엄격한 이민통제정책과 소요사태의 사회적·경제적 해결책 마련 등으로 대응하였다. 사회적·경제적 해결책으로는 저소득층 대상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국제결혼 및 가족재결합 관련 제도 개선, 교육 및 고용의 기회 균등 보장, 인종차별 금지법안의 강화 등이

121 『동아일보』, “사르코지 “불법사위 타협 없다”, (2007. 11. 29).

122 박단, 앞의 글.

제시되었다.¹²³

프랑스인들의 입장에서 무슬림 이민자들과의 공존이 부담스러워지면서 경제적 불황과 실업, 치안문제 등에 대한 일종의 희생양으로 극우파들의 논리에 동조하는 현상이 일어났다.¹²⁴ 프랑스 내 무슬림 이민자 갈등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무슬림 이민자, 특히 2·3세대의 프랑스 사회로의 통합 및 무슬림 공동체 내 정체성 문제에 연결된다. 그러므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슬람포비아 등 무슬림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도출과 프랑스의 전통적 공화주의 사회통합모델의 수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이다.¹²⁵

2. 프랑스의 급진 이슬람주의 대응과 대테러 정책

가. 프랑스의 대테러 체계

프랑스는 대테러정보통합기구로서 국토감시국(DST) 산하에 대테러조정통제본부(Unite de Coordination de la Lutte Antiterroriste)를 설치·운영하고 있다.¹²⁶ 프랑스의 테러 대응체계는 국내안보회의(DSC)와 주무기관인 내무부에서 테러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대테러조정통

123 박재영, 앞의 글, p. 118.

124 김민정·홍지영, “서유럽 극우정당 지지 동기 분석”, 『국제정치논총』 제52집 2호 (2012), pp. 197-232.

125 박재영, 앞의 글, pp. 117-120.

126 이만중, “경찰의 테러대응체계 법제에 관한 고찰”, 『한국테러학회보』 제7집 2호 (2014), p. 97.

제실(UCLAT)에서 테러정보를 통합하고 있다.

중앙집권형의 국가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 경찰제도는 기능적으로 한국과 유사한 대테러 조직구성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국립경찰 및 군경찰이 독자적 권한과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주요 테러 관련 법률 및 조직체계는 [표 1]과 같다.

유럽에서 급진 이슬람주의로 인한 지하드 목적의 테러가 가장 많이 발생한 프랑스의 대테러정책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테러법 개정안(2015)」은 공공장소의 영상 감시, 인터넷·휴대폰의 통화기록 조회권 강화, 테러용의자 구금기한 연장, 급진 이슬람주의 및 폭력적 극단주의 가담자로 의심되는 자국민에 대하여 외국 여행 제한, 여권 임시 압수 및 무효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일부 테러행위의 처벌 가능성을 규정하였다.¹²⁷

둘째, 「정보법(2015)」은 「샤를리 엡도(Charlie Hebdo)」 테러를 계기로 테러정보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자국민의 온·오프라인 활동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고 있다.

셋째, 내무부 산하 국토감시국(DST)과 경찰청 정보국(RG)의 통합조직인 국내안전총국(DGSI) 중심으로 대테러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이다. 과거 내무부의 국토감시국(DST)은 방첩·국제테러리즘 대응업무, 경찰청 정보국(RG)은 체제전복·자생테러 대응업무를 각각 수행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국립경찰의 주도로 테러사건 수사 및 정보기관 수사지원

127 지하드 참전 등 테러 가담을 목적으로 하는 출국 또는 귀국 시 최장 6개월 유효한 출국금지 조치 및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¹²⁸

[표 1] 프랑스의 테러관련 주요법률 및 조직체계

구분	법률 및 조직체계	비고
법적 근거	형법 형사소송법 테러리즘과 국가안보 침해에 관한 법(1986) 정보법(2015)	제421조 테러행위 처벌규정에 따라 테러단체 참여, 테러단체 자금·물자 지원, 테러행위 교사, 테러행위 선전·선동, 테러목적 물건 소지, 테러집단 활동지역 체류행위 등 처벌 대테러법 개정안(2015)은 공공장소 비디오 감시, 인터넷 휴대폰 통화기록 조회권 강화, 테러용의자 구금 기한(6일) 연장, 이슬람 극단주의로 의심되는 자국민 대상 6개월간 외국여행 제한, 여권 임시 압수 및 무효 추진 정보법(2015)은 샤를리 엡도 언론사 테러를 계기로 정보활동에 법적 틀 제공, 테러선동 인터넷 사이트 접근 차단 등 국민의 온·오프라인 활동 감시권 한 허용
정책 기구	국내안보회의 (DSC)	법집행 및 정보공동체 간 협력을 위해, 대테러 조정본부의 중요 결정사항 보조 및 대테러 관계기관 간 토론 대통령이 회의 주재, 최고 안보정책 결정기구로 상정된 테러관련 안전심의
주무 기관	내무부 국내안전총국 (DGSI)	내무부 장관소속의 국내 정보총괄기구(2014) 테러정보 수집 및 감시활동 수행 2018년까지 1,400여명 인력보강
테러 정보 통합 기구	대테러조정통제실 (UCLAT)	내무부 산하 기구로 국내안전총국, 국외안전총국, 군경찰, 세관수사정보국 등에서 파견된 연락관, 국내안보위원회 테러전담 경찰요원 등으로 구성 대테러 관련 부서의 활동조정, 테러관련 정보의 취합·분석·전파, 국내안보 위원회에서 테러관련 안전상정 임무수행
수사 기관	국립경찰 군경찰 검찰청	중앙집권형의 경찰제도하에서 국립경찰 주도로 대테러 공작, 테러사건 수사 및 대테러 정보기관 수사 지원활동 수행 정보기관과 협력관계를 통해 독자적 권한과 임무 수행 특공대를 통한 테러사건 진압
정보 기관	국내안전총국 (DGSI) 국외안전총국 (DGSE) 군사정보총국 (DRM)	DGSI는 테러정보 수집 및 감시활동 DGSE는 국방장관 직속으로 한 내각과 국장을 정점으로 한 5개국(전략국, 정보국, 공작국, 지원국, 기술국)으로 구성, 해외정보수집, 군사전략 정보, 전자감시, 간첩활동 추적 적발 DRM은 군 정보담당 정보기구로 군사정보활동 기획, 조정, 조사업무 수행 및 군사정보의 효율적 활용

출처: 권오국·김윤영, "국제사회의 테러리즘 동향과 국내 테러대응체계 및 시사점 분석," 『통일문제연구』, 제29권 1호 (2017), pp. 179-180 재구성.

128 권오국·김윤영, "국제사회의 테러리즘 동향과 국내 테러대응체계 및 시사점 분석," 『통일문제연구』, 제29권 1호 (2017), p. 181.

나. 프랑스의 급진 이슬람주의 및 자생테러 대응방안

프랑스의 대테러정책은 그동안 강경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2012년 툴루즈 테러 사건¹²⁹ 이후 무슬림 이민자의 급진화를 예방하기 위한 연성조치 도입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2013년 프랑스 국방백서는 “급진화 방지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개진”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¹³⁰ 프랑스 출신 외국인 테러전투원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프랑스인의 시리아 내전 참전을 막기 위한 「급진화 방지안(Le Plan National de Prévention de la Radicalisation)」을 발표하게 된다.¹³¹ 급진화 방지 전략은 특히 영국이 7/7 런던 테러 이후 취하고 있는 급진 이슬람주의 대응조치에서 착안하여, 여기에는 급진화 방지책으로 핫라인 상담전화개설, 테러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그의 부모 및 가족들에게 자문 및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센터 설립 등을 포함하고 있다.¹³² 특히 영국의 「Channel」 사업¹³³과 유사한 연성조치를 통해 급진화 성향에 빠질 수 있는 청년을 초기 단계에서 지역사회 내 무슬림 공동체의 주요

행위자가 지원해주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다.¹³⁴

2015년 핫라인 상담전화 개설 후 약 1년 만에 급진 이슬람주의 경향이 4,300여 건이 접수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상담전화에 접수된 건수 중 다수가 26살 미만의 청년층이며 최근 개종한 무슬림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여성이 40%에 해당된다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¹³⁵ 그러나 프랑스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연성조치를 시행하는데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무슬림 공동체의 이맘 등 특정 종교지도자와 공식적인 협력을 통한 급진화 방지 방안이 라이시테 원칙 하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랑스는 무슬림 종교지도자인 이맘과 경찰의 공조, 이맘과 공공기관과의 공식적 공조를 통해 연성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었다.¹³⁶

그럼에도 주목할 만한 진전은 있었다. 프랑스 정부는 기존의 이슬람 문화에 대한 철저한 공적 배제의 입장을 점차 철회하여 이슬람 대표기구들¹³⁷을 조직화하고, 이들 조직과의 협의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프랑스 내 무슬림 공동체의 안정과 사회통합을 모색하고 있다.

129 머니투데이, “佛 이슬람 테러범 메라, 3차례 공격 모두 촬영”, (2012. 3. 20) 2019년 10월 15일 검색

130 Liver Blanc, *Defense et la Sécurité Nationale* (Paris, Direction de l'Information Légale Administrative, 2013), p. 104.

131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 참조.
<https://www.cipdr.gouv.fr/prevenir-la-radicalisation/mise-en-oeuvre-du-pnpr/> (검색일: 2019. 8. 11).

132 Comité Interministériel de Prévention de la Délinquance, *Guide Interministériel de Prévention de la Radicalisation*, (Comité Interministériel de Prévention de la Délinquance, 2016)

133 테러에 연루될 수 있는 개인을 급진화 초기 단계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다기관 협력 프로그램을 말한다.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hannel-guidance> (검색일: 2019. 9. 24).

134 Dorle Hellmuth, “Countering Jihadi Terrorists and Radicals the French Way”, *Studies in Conflict and Terrorism*, Vol. 38, (2015), pp. 979-997.

135 박선희, “프랑스의 대테러정책: 자생적 테러리즘과 대테러 정책의 변화”, 『평화학연구』 제17권 3호 (2016), pp. 134-135.

136 Jean Luc-Marret, “French Experience in Dealing with Radicalization and De-radicalization”, presented to 2019 FRS-INSS Security Dialogue, (June 25, 2019). Unpublished.

137 이슬람사상위원회 (Council of Thought on Islam), 무슬림대표위원회 (Representative Council of Muslims), 프랑스 무슬림신앙위원회가 해당.

IV

영국의 이민자 갈등과 급진 이슬람주의

1. 제로 이민국과 유럽 이슬람 정치세력의 중심

2. 영국의 급진 이슬람주의 대응과 대테러 정책

1. 제로 이민국과 유럽 이슬람 정치세력의 중심

가. 영국의 무슬림 이민의 역사

사실 영국은 유럽의 그 어떤 국가와 비교하여도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다.¹³⁸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종교적·정치적 박해를 피해 다양한 출신국가를 배경으로 한 사람들이 이주해왔기 때문이다. 20세기 초까지 영국의 최대 이민자 공급지는 아일랜드였다. 1800년대 아일랜드 합병과 함께 점차 증가한 아일랜드 이민자는 아일랜드 기근 시기에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19세기 말 아일랜드인들의 미국 이민이 증가하면서 영국의 아일랜드 이민자 수는 하향추세를 나타내었다.¹³⁹

이후 1870~1914년 사이 120,000명의 동유럽 유대인들이 박해를 피해 영국으로 이주하였다. 비록 아일랜드 이민자의 수에 비해 유대인 이민자의 수가 훨씬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반유대주의가 이민자 정서와 결합되면서 유대인 이민자에 대한 영국 사회의 반발은 컸다.¹⁴⁰ 영국 정부는 유대인 이민자 유입에 대한 대응책으로 1905년 「외국인법(Alien Act)」¹⁴¹과 1914년의 「외국인규제법(Alien Restrictions

138 J. Geipel, *The Europeans: An Ethnohistorical Survey* (London, 1969), pp. 163-164; 정희라, "영국: '자유방임 이민국'에서 '제로 이민국'으로", 『현대서양사학』, pp. 63-64.

139 Barry Hazely, "The Irish in Post-War England: Experience, Memory and Belonging in Personal Narratives of Migration 1945-69", Ph.D Thesis, Univesrity of Manchester, 2012.

140 이영석, "빅토리아 후기 영국 사회와 유대인 문제", 『영국연구』 12호 (2004), pp. 47-74 참조

141 내무장관에게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의 이민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 법에 따르면 이민자가 정치적·종교적 박해의 피해자라는 점을 입증할 경우 입국을 거부할 수 없었다. Zig Layton-Henry, *The Politics of Immigration: Immigration, Peace and Race Relations in Post-War Britain* (Oxford, 1992), pp. 5-7.

Act)』¹⁴²을 제정하여 이민자를 제한하고자 하였다.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대전은 영국의 이민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영국의 무슬림 이민자 수는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전시 영국 정부는 부족한 노동력을 영국의 식민지인으로 대체하였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종전 후에도 영국에 체류하였고, 가족이나 친지를 영국으로 초청하였다.

종전 후 영국은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해 고려한 이민 대상은 영국과 인종적·문화적으로 동질성이 있는 유럽인이었다.¹⁴³ 그러나 영국정부가 예상하지 못했던 新영연방 국가로부터의 자발적인 이민이 증가하게 되었다. 당시 영국의 노동력 부족 현상은 舊식민지 국가에도 알려졌고, 또한 영국으로의 출입이 자유로웠던 新영연방 국가로부터 이민을 촉진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국 무슬림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남아시아계 이민도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당시 인도의 정치적 상황 또한 무슬림의 영국 이민을 증가시키는데 일조하였다.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리로 무슬림은 파키스탄으로 이주해야만 했는데, 인도 편자브 지역에 거주하던 무슬림과 아삼 지역에 거주하던 벵골 출신 무슬림은 이주가 불가피해지자 파키

스탄보다 훨씬 나은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제공되는 영국행 이주를 결심한 것이다.¹⁴⁴ 그 결과 영국은 인종적으로 흑인과 아시아인, 그리고 종교적·문화적으로 무슬림 뿐만 아니라 힌두교도, 시크교도 등이 공존하는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변화되었다.¹⁴⁵

이 시기에 영국의 무슬림 이민자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新영연방 출신인 무슬림 이민자들은 英제국 신민으로서의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1914년 외국인 규제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무슬림 이민자들은 처음부터 영국 정치인들이나 대중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가 1962년까지 자유방임적인 이민 정책을 유지한 데에는 영국 정치인들의 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舊식민지에 대한 애착 때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영국 정부는 英연방 체제를 통해 미국과 소련으로 양분된 냉전체제 속에서 영국의 위상을 유지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1962년 英연방 이민법(Commonwealth Immigration Act)」을 제정하며 이민규제 정책으로 돌아서게 되었다. 1958년 노팅엄과 런던 노팅힐 지역에서 주류 영국인들과 이민자들 사이에 대규모 충돌이 발생함에 따라 이민자들이 거주하는 일부 지역의 문제로 간주되던 이민자 문제가 국가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¹⁴⁶ 경기 침체에 따른 일자리 문제 등 노동시장에서 이민자들과 주류 영국인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점차 사회

142 내무장관에게 외국인의 출입과 추방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부여하였다. 정희라, 앞의 글, pp. 64-65.

143 일례로 전쟁 중 영국군의 지휘 하에 있었던 폴란드 재향군인들에게 이민을 권고하였고, 보조금 등의 이민 장려책을 마련하여 폴란드인 125,000여 명을 영국에 영구 거주시켰다. 또한 발트해와 동유럽 국가, 그리고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등지에서도 노동자들을 모집해 왔고, 이들의 영국 정착을 도왔다. 무엇보다 정부가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대 공급지로 주목한 곳은 아일랜드였다. 전쟁 중에도 영국 정부는 더블린에 이민사무소를 설치하여 이민을 유도하였다. 전후 정부는 아일랜드의 의사와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와 모든 아일랜드 여성을 입국심사에서 면제시켜주었고, 모든 아일랜드 이민자에게 여행경비 및 숙식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48년 영국 국적법」에 아일랜드인에게 영국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권리와 선거권을 주는 조항을 만들기도 하였다. 위의 글, pp. 65-55.

144 한국이슬람학회, 앞의 글, p. 142.

145 Ian R. G. Spencer, *British Immigration Policy since 1939: The Making of Multi-Racial Britain* (London, 1997), pp. 13-20.

146 *Ibid.*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영국정부는 이후 1968년·1971년·1981년에 세 차례의 개정을 통해 인종주의에 기초한 철저한 이민규제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英國 시 절 지나치게 확대된 시민권을 축소시켜 나가면서 결국 인종주의에 기초 한 규제원칙을 만들어내었다. 그 결과 영국의 「이민법」은 외견상 인종차 별과 무관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앵글로색슨인이 아닌 인종은 배제하 는 방식으로 설정되었다.¹⁴⁷

1981년 제정된 「1981년 영국국적법」은 영국에서 거주 및 시민권을 향유할 수 있는 대상을 보다 분명하게 만들었다. 이 법은 영국 국적 소지 자들을 세 유형으로 구분하여¹⁴⁸, 영국 시민권 소지자만이 출입국에 대

147 「1962년 영연방 이민법」은 영제국 신민에 해당하는 이민자들을 그룹 A(직업이 있는자), 그룹 B(숙련 노동자 및 영국에 이득이 될 수 있는 자), 그룹 C(비숙련 노동자)로 분류해 바우처를 나누어 주고, 필요에 따라 바우처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이민을 통제해 나갈 수 있게 하였다. 영국 정부는 특히 C그룹 바우처의 수를 조절함으로써 유색 인종 이민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다. Kathleen Paul, *Whitewashing Britain: Race and Citizenship in the Postwar Era (Of Religi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pp. 166-173. 1968년 영국은 또 한 차례 영연방 이민을 규제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68년 「이민법의 직접적인 계기는 케냐 출신의 동아프리카 아시아인의 이민이었다. 1963년 케냐는 독립과 함께 '아프리카화'를 추진해나갔고, 이 과정에서 케냐에서 아시아인들이 차별을 피해 영국으로 이주해왔다. 이들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1967년부터 매달 천여 명씩 영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1968년 2월에는 단 2주간 10,000명의 동아프리카 아시아인이 영국에 들어왔다. 다급해진 영국 의회는 3일 만에 새로운 이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본인이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영국에서 출생, 입양, 등록 또는 귀화하지 않은 영연방 시민은 모두 이민규제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아프리카 아시아인의 영국유입을 막았다. Spencer, *op. cit.*, pp. 140-143. 「1971년 이민법」은 신영연방 국가로부터의 이민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으로써 마련되었다. 이 법은 영제국 시민으로서 특권을 가지고 있던 자와 그렇지 않은 외국인들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던 영국인과 외국인이라는 범주를 본질적으로 인종적 구별에 기초한 범주인 본국인과 비 본국인으로 대체하였다. 본국인은 영국과 영연방 시민 중 본인 또는 부모나 조부모가 영국 내에서 출생, 입양, 귀화 또는 등록된 자와 영국과 영연방 시민 중 영국 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비본국인은 위에서 말한 본국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은 영연방 시민과 외국인이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게 함으로써 유색인종인 신영연방 출신들의 영국 이민을 막았다. Paul, *op. cit.*, pp. 180-181. 정희라, 「영국: '자유방임 이민국'에서 '제로 이민국으로」, pp. 67-70; 박단 편, 『현대 서양사회와 이주민: 갈등과 통합 사이에서』 (한성대학교 출판부, 2009) 재인용.

148 첫 번째 유형인 본인이나 부모 혹은 조부모가 영국에서 출생, 입양, 귀화 또는 등록된 자나 영연방 시민 중 영국 내 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영국 시민권을 주었다. 두 번째 유형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영국 속령에 거주하는 자 들로, 이들에게는 영국 속령 시민권을 부여하였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 중 어느 범주에도 해당하지 않는 영연방

해 전혀 규제를 받지 않고 영국에 살 수 있는 거류권을 가지도록 하였다. 「1981년 국적법」은 내용면에서 새롭지 않지만, 시민권과 이민법을 결합 시켜 법제화하여 보다 철저히 이민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¹⁴⁹

그러나 「1981년 국적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이민규제는 계속 영국의 정치문제로 등장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동구 공산권의 몰락과 유고슬라비아 내전 등으로 발생한 난민이 정치적 문제가 되었다. 냉전체 제 종식 후 영국은 어떠한 명분이나 영국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난민들 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1996년 난민과 이민법」에 따라 심각한 박해의 위험이 없는 국가로부터의 난민은 입국을 허용하지 않으며, 난민들에게 자녀수당 및 주택보조금 등 사회복지 혜택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2001년 반테러, 범죄 및 보안법」과 「2005년 테러방지법」을 통 해 이민자의 입국심사를 더욱 강화하였다.¹⁵⁰ 이로써 영국은 이민규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제로 이민국'이라고 불리게 되었다.¹⁵¹ 그러 나 여전히 전체 영국 인구의 8% 정도가 무슬림을 포함한 아시아인 및 흑 인 등 소수 이민자들이다. 따라서 이민자의 유입에 따른 다인종·다문화 사회로써 영국은 사회적·문화적인 갈등을 겪게 된다.

시민에게는 영국 해외 시민권을 주었다.

149 정희라, 앞의 글, p. 70.

150 김수행, 「영국의 제노포비아 현상에 대한 연구」, 김세균 편, 『유럽의 제노포비아』 (문화과학사, 2006), pp. 45-46.

151 Christian Joppke, *Immigration and the Nation-State: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Great Britain* (Clarendon Press, 2000).

나. 영국의 무슬림 이민자 문제와 이민자 갈등

무슬림 이민자들이 정착함에 따라 영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영국 정부는 이민자 통합에 관한 담론의 제시와 제도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당시 노동당 출신 내무장관이었던 젠킨스(Roy Jenkins)는 이민자 통합을 “획일적인 균등화의 과정이 아닌, 상호 관용의 분위기 속에서 기회의 평등에 의해 배가 되는 문화적 다양성의 균등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문화적 다양성과 기회의 평등의 결합은 영국 이민자 통합정책의 근간으로 작용해왔다.¹⁵²

제도적 측면에서는 이민자에게 기회의 평등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들이 일련의 인종평등관련 법안들과 「인종평등위원회(Commission of Racial Equality, CRE)」의 설립으로 나타났다. 지역적 차원에서도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단체인 「인종평등평의회(Race Equality Councils, RECs)」들이 수립되어 동 위원회의 지원을 통해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¹⁵³

그러나 영국에 거주하는 무슬림 이민자는 영국인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인종적·종교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들은 문화적 충돌에 해당하는 이민자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영국 주류사회에서 무

슬림 이민자가 경험하는 갈등은 종종 종교적인 신념의 표시로 나타났는데, ‘살만 루시디 사건’은 영국의 대표적 무슬림 이민자 갈등사건이라 할 수 있다.

1988년 작가 살만 루시디(Salman Rushdie)는 「악마의 시(The Satanic Verses)」라는 책을 출간한다.¹⁵⁴ 책 내용에 분개한 이란의 정치적·종교적 지도자 호메이니(Ayatollah Khomeini)는 루시디에게 이슬람 모독죄를 적용하여 종교법령으로 처형할 것, 즉 ‘파트와’를 명령한다. 이에 따라 루시디 지지 성명을 발표하는 사람들과 대립하게 되었고, 이란의 급진 이슬람주의 단체는 루시디에게 현상금 150만 달러를 제시하였다. 결국 루시디는 영국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호메이니 사후 이란 대통령에 의해 사형선고가 철회될 때까지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¹⁵⁵

이를 계기로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이 이란과 교류를 단절하는 등 갈등이 유럽 전체로 증폭되었다. 유럽 공동체는 이란에 경제적·외교적 제재 조치를 취하고, 이슬람 국가들은 이 책에 금서 조치를 취했다.¹⁵⁶ 이슬람 국가와 무슬림 이민자가 거주하는 서구권 국가에서 루시디에 대한 시위가 빈발하며 폭력사태와 폭탄테러도 발생하게 되었다.

영국 무슬림들은 「악마의 시」의 판매금지와 신성모독죄의 확대적용

152 John Rex, *Ethnic Minorities in the Modern Nation State*, (London: Macmillan Press, 1996), pp. 55-56.

153 1976년 설립된 인종평등위원회는 인종차별의 금지를 위해 활동하며 이민자 공동체간의 좋은 관계와 기회의 평등을 증진하며 인종 관련법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수정을 위한 제안을 정부·장관에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내무부에 인종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고 법률서비스의 제공과 인종차별에 관한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업무, 인종차별 금지를 위한 프로그램 연구도 지원하였다. Yasmin Nuhoglu Soysal, *Limits of Citizenship*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94), pp. 73-74; 박재영, 앞의 글, p. 111 재인용.

154 「악마의 시」는 발간된 해인 1988년 11월 영국의 「휘트브래드(Whitbread) 문학상」을 수상하고, 독일에서는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함으로써 사회적 소란과는 상반되는 문학적 찬사를 받았지만, 출판된 지 열흘만인 1988년 10월 5일에 인도에서 가장 먼저 판매가 금지되고, 이어서 남아프리카공화국,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소말리아, 방글라데시, 수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카타르 등지에서도 판매가 금지되었다. 김남국, “영국과 프랑스에서 정치와 종교 - 루시디 사건과 헤드스카프 논쟁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4집 제4호 (2004), pp. 352-355.

155 그리고 이때의 도피생활을 바탕으로 『조지프 앤턴』(문학동네, 2015)을 저술하기도 했다.

156 한국이슬람학회, 앞의 글, p. 746.

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조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불만을 가진 런던 북부 브래드포드 시의 무슬림 단체는 1989년 1월 14일 「악마의 시」를 공개적으로 불태우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영국 전역에서 주목을 받는데 성공하였지만, 원래 행사 취지 및 목적과 달리 무슬림에 대한 거센 비난을 받았다.¹⁵⁷ 이후 루시디 사건은 종교적 신념의 보호보다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으로 전개되었다.

루시디 사건은 “영국의 무슬림 이민자들이 이슬람교도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영국 무슬림 이민자들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영국 사회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무슬림 이민자의 과격한 행동과 극심한 저항에 직면하면서 무슬림 이민자의 존재를 실감하게 되었다. 결국 루시디 사건은 무슬림 이민자와 영국 주류 사회의 문화적·종교적 가치 차이를 보여준 일종의 ‘문화 전쟁’이었다.¹⁵⁸

한편 영국 내에서 무슬림 공동체의 형성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무슬림 공동체의 성장은 무슬림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종평등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켰고, 정치적 문제로 다뤄지기도 하였다. 차별철폐 및 인종평등에 대한 요구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폭동으로까지 발전했다. 경찰과 공공부문에서 경험하는 차별에 항의해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 그리고 2002년 무슬림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들에서 무슬림 이민자 청년층의 폭동이 빈발했다.¹⁵⁹

2005년 7월 7일 런던테러는 새로운 무슬림 이민자 갈등을 전개하게

되었다. 7/7 런던테러는 10대에서 30대에 해당하는 파키스탄계 및 자메이카계 무슬림 이민자 4명이 테러범으로 밝혀지자 영국 사회는 큰 충격을 받게 된다. 테러범 모두가 영국에서 출생하여 영국식 교육을 받았고, 전과가 없는 평범한 영국 시민들이었던 것이다. 7/7 런던테러는 유럽의 급진 이슬람주의에 경도된 자생테러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7/7 런던테러 이후 그동안 영국 사회에서 허용해왔거나 묵인해왔던 이슬람 문화는 비판 대상이 되고 있으며,¹⁶⁰ 무슬림 역시 더욱 자신의 문화를 당당하게 내세우고 있어 영국 주류 사회와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2. 영국의 급진 이슬람주의 대응과 대테러 정책

가. 영국의 대테러 체계

영국은 대테러정보통합기구로서 MI-5 산하에 합동테러리즘분석센터(Joint Terrorism Analysis Center, JTAC)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테러 대응체계는 대테러안보실(Office for Security and Counter-Terrorism, OSCT)과 주무기관인 내무성 합동정보위원회(Joint Intelligence Committee, JIC)에서 테러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내무

157 박재영, 앞의 글, p. 111-112.

158 한국이슬람학회, 앞의 글, p. 748.

159 Stephen Castles & Mark J. Miller, *The Age of Migration*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2003) p. 102.

160 2016년 노동당 정치인 사디크 칸이 런던시장으로 당선되었다. 선거운동기간 상대진영의 책 골드스미스가 「매일 온 선데이(The Mail on Sunday)」에 “(선거일인) 목요일, 테러리스트를 친구로 여기는 노동당에게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를 넘겨줄 겁니까?”라는 제목과 런던 7/7테러로 인해 파괴된 버스사진이 실린 칼럼을 기고하자, 인종주의 비판과 동시에 무슬림 문화 비판의 논쟁은 다시 활발해졌다. 시사IN, “런던 시민들은 왜 무슬림을 시장으로 택했나?” (2016. 5. 23, 검색일: 2019. 10. 29). 파키스탄계 무슬림 이민자인 사디크 칸이 시장으로 당선되었으나, 무슬림 문화에 대한 논쟁과 급진 이슬람주의 테러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성 보안부 산하 합동테러분석센터(Joint Terrorism Analysis Center, JTAC)에서 테러정보를 통합하고 있다.

수사기관으로는 수도경찰청 대테러본부를, 그리고 정보기관으로는 보안부(Security Service(SS), MI-5), 비밀정보국(Secret Intelligence Service(SIS), MI-6), 통신정보부(Government Communications Headquarters, GCHQ), 국방정보부(Defence Intelligence Agency, DIS) 등을 들 수 있다.¹⁶¹ 영국의 테러법률 및 대응체계는 [표 2]과 같다.

[표 2] 영국의 테러 법률 및 대응체계

구분	법률 및 조직체계	비고
법적 근거	테러리즘법(2000)	국제테러활동에 대처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2000년 7월 20일 테러혐의자 수사 및 처벌 등을 목적으로 제정·시행
	테러예방 및 수사조치법(2011)	2011년 12월 제정된 「테러예방 및 수사조치법, 2011」은 2014년 이슬람국가(IS)에 의한 테러리즘 희생자 증가에 따라 「데이터 보유 및 수사권법(DRIP 2014)」으로 다시 개정
	대테러 및 보안법(2015)	ISIS 등장과 국제테러리즘 위협이 높아지고 유럽권 국가에서 지속적인 테러발생이 일어나자 영국에서 아랍권 국가들로 이동하거나 복귀하는 인원들을 통제·관리하기 위해 제정
정책 기구	대테러안보실(OSCT)	2007년에 설립된 영국정부 홈 오피스에서 대테러 활동을 주도하는 부서로서 경찰 및 보안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며 안보 및 테러 방지를 위해 내무상에게 보고
주무 기관	내무성 합동정보위원회(JIC)	JIC는 1963년에 창설되었으며, 외무성 정보전략문제 담당차관보가 위원장으로 임명되고, 위원은 SIS장을 포함한 정보기관장들로 구성되며 주 1회 정기적으로 회합 SIS, SS, DIS 등의 정보를 대조·분석하고 주요문제에 관한 정보 판단과 문제가능성에 대한 예고, 주요상황, 장기전망 등 정보를 관계장관 제공이 주된 임무

161 권오국·김윤영, “국제사회의 테러리즘 동향과 국내 테러대응체계 및 시사점 분석,” 『통일문제연구』, 제29권 1호 (2017), pp. 182-183.

구분	법률 및 조직체계	비고
테러 정보 통합 기구	내무성 보안부 산하 합동테러분석센터(JTAC)	JTAC는 보안부(SS), 비밀정보부(SIS), 경찰, 국방성(MoD) 등 16개 정보부처 및 기관이 참가하는 테러리즘정보 통합기구 JTAC장의 책임 하에 국내의 테러관련 정보를 분석 및 평가하고 위협단계를 평가하여 경보를 발령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
수사 기관	수도경찰청 대테러본부(Counter-Terrorism Command, CTC)	영국의 수도경찰청(MPS: Metropolitan Police Service)은 런던을 포함하는 수도권에 대한 치안수요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영역에서 국가적 치안사무를 담당 2006년 10월 대테러부와 특수부가 통합되어 창설된 CTC는 테러사건이나 수사에 어떤 형태로든 즉시 수사팀의 구성원과 함께 모든 운용능력을 제공
정보 기관	보안부(SS, MI5) 비밀정보국(SIS, MI6) 통신정보부(GCHQ) 국방정보참모부(DIS)	GCHQ는 보안부(SS), 비밀정보국(SIS)와 함께 영국의 3대 정보기관중의 하나에 해당 DIS는 군사정보부인 MI5와 국방정보참모부(DIS)와 함께 JIC의 지휘 아래 소속

출처: 권오국·김윤영, “국제사회의 테러리즘 동향과 국내 테러대응체계 및 시사점 분석,” 『통일문제연구』, 29(1), 2017, pp.182-183; 윤태영, “영국의 테러리즘 위기관리 체계와 전략,” 『한국위기관리논집』 6(1), 2010.3, p.62, pp.87-88 참조.

영국은 북아일랜드 공화국의 테러에 대처하기 위해 1973년 「북아일랜드긴급권법」 및 1974년 「테러방지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제테러활동에 대처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2000년 7월 20일 테러혐의자 수사 및 처벌 등을 목적으로 「대테러리즘법(Terrorism Act, 2000)」을 제정·시행해왔다. 영국의 대표적인 테러리즘 대응체계는 「테러리즘법(Terrorism Act, 2000)」은 기본법으로 역할을 해왔고 과격단체의 폭력행위와 사이버공간에서의 파괴적 행위도 테러로 규정해왔다.¹⁶² 영국은 이 법을 제정한 이후 개정을 거듭하면서 대테러 체계를 강화해왔다.¹⁶³

그 후 2011년 12월 「테러예방 및 수사조치법(Terrorism Prevention

162 이동권, “최근 주요국의 테러대응책 동향과 시사점,” 『안보팩트』, (2018).

163 김태우, “19대 국회, 대테러법 끝내 외면하는가,” 『국가미래연구원 ifs POST』, (2018).

and Investigation Measures Act. 2011)』이 제정되었다가 2014년 ISIS에 의한 테러 희생자 증가에 따라 동 법률을 개정하여 「데이터 보유 및 수사권법」이 만들어졌으며, 「대테러 및 보안법(Counter-Terrorism and Security Act 2015)」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최근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테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 2016년 9월 일명 ‘스파이헌장(Snooper's Charter)’이라 불리는 「수사권 강화법(사이버테러방지법)」의 제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2017년 7월 G20 정상회의에서 당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테러범들의 자금을 추적·차단할 수 있는 감시망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국제사회에 촉구하기도 하였다.¹⁶⁴

현재 영국의 테러대응체계를 보면, 모든 테러행위에 대하여서는 내무성이 그 대응책임을 지며 테러사건의 수사, 정보수집 등은 런던경시청 특별반에서 취급하고 있다.¹⁶⁵ 테러사건에 대한 부처 간 원조를 위해 비상센터를 두고 있으며, 내무성은 내각과 수상 및 의회에 대한 테러사건 보고의무를 가지고 있다. 내무성 산하의 보안부(SS, MI5)에서는 평상시 외국과의 대테러조직과의 일상적인 연락체계 및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2003년 6월 설치된 내무장관 산하 보안부(SS, MI5) 합동테러 분석센터(JATC)에는 보안부, 비밀정보부(SIS, MI6), 경찰, 국방성 등 16개 정부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¹⁶⁶

164 이동권, 앞의 글.

165 위의 글.

166 위의 글.

나. 영국의 급진 이슬람주의 및 자생테러 대응방안

영국은 9/11 테러 이후 일명 「콘테스트(CONTEST)」으로 불리는 대테러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콘테스트 정책은 하위전략으로 추적(Pursue), 예방(Prevention), 보호(Protect), 대비(Prepare)와 같은 4P 전략을 가지고 있다.¹⁶⁷ 추적과 예방은 테러위협을 감소시키는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보호와 대비는 테러공격으로부터 영국의 취약성 감소를 목표로 하는 포괄적 대테러 전략이라 할 수 있다.

7/7 런던 테러 이후 콘테스트 정책은 동 사건의 테러범이 자생테러범이라는 사실을 반영하여 「콘테스트 2(CONTEST 2)」 정책으로 수정하였다. 「콘테스트 2」 정책은 특히 예방전략의 강화를 통하여 인종적·문화적·종교적 다양성 증진을 강조하고 있다. 「콘테스트 2」 정책 이후 영국의 대테러 정책은 무슬림 이민자를 중심으로 급진 이슬람주의로의 경도를 우선적으로 예방하는 정책으로 변화하게 된다.¹⁶⁸

7/7 런던 테러 이후 영국 정부는 「극단주의 합동예방(Preventing Extremism Together)」프로젝트를 통해 무슬림 대표기구와 같은 성격의 무슬림 지도자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는 영국 내 무슬림 이민자들이 급진 이슬람주의로 경도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효과적인 연성조치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이다.¹⁶⁹

167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unter-terrorism-strategy-contest-2018> (검색일: 2019. 9. 24).

168 Home Office, *CONTEST The United Kingdom's Strategy for Countering Terrorism*, (Home Office, 2018).

169 Angel Rabasa, Stacie L. Pettyjohn, Jeremy J. Ghez, & Christopher Boucek, *Deradicalizing Islamist*

또한 급진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영국 정부는 무슬림 공동체를 중요한 파트너로 설정하여 공동협력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로 「급진적 중도(Radical Middle Way)」가 있다. 유명인사가 영국 전역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이슬람 혐오와 급진 이슬람주의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¹⁷⁰ 또한 레스터(Leicester)시의 다문화정책 모델 사례와 레스터 대학(Leicester University)의 혐오연구센터는 급진 이슬람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영국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¹⁷¹

Extremists (RAND Corp, 2010), p. 124.

170 FACEBOOK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RadicalMiddleWay/> 참조. 주요 강연은 유튜브(YouTube)나 비메오(Vimeo)에 업로드되고 있다. (검색일: 2019. 10. 21).

171 Leicester University Centre for Hate Studies, <https://le.ac.uk/hate-studies> (검색일: 2019. 10. 21).

V

독일의 이민자 갈등과 급진 이슬람주의

1. ‘가스트아르바이터’와 외국인 문제
2. 독일의 급진 이슬람주의 대응과 대테러 정책

1. ‘가스트아르바이터’와 외국인 문제

가. 독일의 무슬림 이주의 역사와 공동체 형성

독일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복구 사업을 위해서 상당한 노동력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영국이나 프랑스와는 달리 독일은 20세기 초에 이미 탈식민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식민지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수급할 수 없었다.¹⁷² 전후복구 사업을 위해 노동력이 필요한 당시 독일은 「마셜 플랜」을 통해 마련된 유럽의 경제적 회생을 위한 토대의 가장 큰 혜택을 본 지역이었다. ‘라인 강의 기적’이라는 수식어가 따를 정도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토대로 독일은 다시 유럽의 경제적 강자로 등장할 수 있었다.

따라서 1950년대 초 독일은 부족한 노동력을 충원하고자 이탈리아와 스페인, 한국 등의 국가와 노동자 ‘모집(Anwerbe)’계약을 체결하여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을 유입하게 된다.¹⁷³ ‘초청 노동자(Gastarbeiter)’라고 불린 노동인구 중 가장 많은 인력은 터키, 특히 아나톨리아 지방 농촌 지역 출신이었다.¹⁷⁴ 독일 정부와 터키 정부가 구상한 계획에서 초청 노동자들은 1~2년 정도의 계약기간 동안만 일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¹⁷⁵ 따라서 초기 이주 노동자들은 한시적 기간 동안 체류한다는

172 조희선, “영국, 프랑스, 독일 무슬림의 이주와 정착 및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 이주 무슬림과의 비교를 위하여”, 『한국중동학회논총』 제31집 1호 (2010), p. 113.

173 박규정, “독일 사회와 무슬림 터키 공동체”, 『서유럽의 급진이슬람주의』, pp. 136-138.

174 Spiegel, “A Sorry History of Self-Deception and Wasted Opportunities”, (2010. 9. 7).

175 본격적인 이주행렬이 시작되기 전인 1961년까지 서독에는 대략 6,500명 가량의 터키인이 체류하고 있었다. 이 시

조건의 노동 계약서를 체결하고, 이러한 순환교체원칙은 모집기간 동안 대체로 지켜졌다. 영국이나 프랑스와는 달리 독일은 혈통주의에 입각한 국적법을 가졌기 때문에 초청 노동자들이 독일 국적을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터키 노동자들이 독일에 정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독일과 터키 정부는 노동자들이 두 나라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국가 간 계약을 체결하였다.¹⁷⁶ 1961년 체결된 독일과 터키 간 협정에 따라 132,800명의 터키인들이 독일로 이주하였고, 1970년에 이르러서는 독일에 거주하는 터키 노동자는 대략 470,000명에 이르게 되었다.¹⁷⁷

1970년대 초 제4차 중동전쟁으로 인한 오일 쇼크에서 세계적 경제위기가 발생하였고, 독일 역시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서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많은 수의 실업자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 독일 경제는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의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서 일자리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지게 되었다. 독일 정부는 노동자 ‘모집 중지’를 결정하였다. 상황이 이

렇게 되자 서유럽 출신의 노동자들은 상당수가 본국으로 귀환하였다.¹⁷⁸

그러나 터키를 비롯한 무슬림 노동자들은 귀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본국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독일 정착을 선택하였고, 오히려 본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하기 시작하였다.¹⁷⁹ 이는 프랑스와 영국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럽의 무슬림 이민자가 증가하게 된 과정도 유사하다. 남·서유럽 출신의 대다수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간 후 터키 노동자는 외국인 노동자 점유율을 30%까지 확대하게 되며 독일에서 가장 큰 외국인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¹⁸⁰

1960년대에는 이스탄불 등 주로 대도시 출신의 터키인들이 이른바 초청 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했지만,¹⁸¹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농촌지역인 아나톨리아 등지에 거주했던 농업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독일로 향하게 되었다.¹⁸² 아나톨리아 지역은 터키에서도 가장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봉건적 위계질서가 강하게 남아있고, 남성과 여성의 역

점까지 터키는 헌법을 통해 자국민이 타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었다. 1961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터키인들에게 여행의 자유라 허락되자 인구 유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 당시 터키는 경제발전이 아직 미약해 도시 지역에서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농업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계절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아 고용이 매우 불안정했다. 뿐만 아니라 어렵게 일자리를 구해도 임금 수준은 매우 열악했다. 터키의 노동시장에 비해 독일의 노동시장은 터키 노동자들에게 훨씬 더 매력적인 조건을 제공했다. 독일의 일자리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그리고 임금수준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 이와 더불어 독일 사회가 자랑하는 탁월한 사회복지제도의 혜택도 향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터키 정부도 자국민의 이주를 더이상 거부하지 않았다. 우선 자국민의 이주가 터키의 경제발전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터키 노동자의 이주는 독일 정부와 기업가들이 간절히 요청한 사안이었기에 이에 협조할 경우 경제 강국인 독일과의 관계를 좀 더 우호적인 단계로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독일 기업의 투자도 유치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독일에서 거주한 터키인들은 노동을 통해 번 돈을 가족이 있는 자국에 송금함으로써 외화 조달 측면에서, 그리고 터키에서 직접 기업을 창업함으로써 투자 측면에서 터키의 경제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또한 이들이 독일로 이주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실업자가 축소됨으로써 고용시장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했다. 박규정, 위의 글, pp. 138-139.

176 조희선, 앞의 글, p. 113.

177 Faruk Sen, "1961-1991, Ein kritischer Rückblick auf die dreißigjährige Migrationsgeschichte der Türk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eitschrift für Ausländerrecht* (1992), p. 76. 박규정, 앞의 글, p. 139 재인용.

178 이러한 사실은 대다수 유럽국가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의 독일 이주가 경제적인 이유였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이탈리아인 노동자들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이민 초기 단계인 1950년대 말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독일정부의 노동자 모집이 종결된 후 독일의 외국인 노동시장에서 이탈리아 노동자의 점유율은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10%로 축소되었다. 박규정, 위의 글, p. 141.

179 한국이슬람학회, 앞의 글, p. 660.

180 박규정, 앞의 글, p. 141.

181 이민 초기 단계에 대도시 혹은 대도시 주변에서 이주한 터키 노동자들의 교육 수준은 그리 낮지 않았다. 그들 중 15.4%는 직업학교, 12.8%는 중등학교, 4.3%는 고등학교, 0.8%는 대학교를 각각 졸업했다. 또한 숙련 노동자의 비율도 30.9%에 달해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에서 이주한 노동자들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다. Karin Hunn, *Nachtes Jahr kenren wir zuruck: Die Geschichte der türkischen Gastarbeiter in der Bundesrepublik* (Göttingen, 2005) in "Next Year We'll Go Back": The History of Turkish "Guest Workers"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https://mronline.org/2008/10/30/next-year-well-go-back-the-history-of-turkish-guest-workers-in-the-federal-republic-of-germany/> (검색일: 2019. 9. 11).

182 Karin Hunn, 위의 글.

할을 엄격히 구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배적인 지역이었다.¹⁸³ 따라서 이 지역 출신 터키 노동자들은 경제적으로 열악하였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독일의 민주적인 정치문화에 낯설고 민감하게 반응했을 것이다.

1973년 이후 독일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초청이 중단되었을 때 약 91만 명의 터키 노동자들이 독일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들 중 대다수가 남성이었다.¹⁸⁴ 당시의 독일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독일 사회가 그들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기간에 한해 독일에 체류하리라 예측하여 이주 노동자의 유입에 큰 우려를 가지지 않았다.

실제로 초기에 이주했던 대부분의 터키 노동자들 역시 독일에서 벌어들인 돈과 기술을 바탕으로 터키로 돌아가 자영업을 할 계획이었다. 따라서 1-2년 단기간 독일에 체류할 예정이라 가족은 터키에 남겨둔 채였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에는 당시 터키의 경제적 상황이 너무나도 열악했고, 결국 터키 노동자들 1세대들은 독일에 장기 체류 혹은 영구 체류를 선택하기 시작했다.¹⁸⁵ 초청 노동자로 유입된 터키 노동자들이 장기적·영구적으로 정착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무슬림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더이상 단기간 체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독일에 거주하는 무슬림 이민자인 동시에 인종적·문화적 소수자가 된 것이다.

이에 상응해 독일 정부 역시 앞서 살펴본 프랑스 정부와 마찬가지로 터키 노동자들의 귀국을 유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터키 노동자의 수가 단기간 약간 축소되기도 했으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추세를 살펴보

면 1980년대까지 터키 출신 무슬림 이민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터키 노동자들이 가족재결합의 목적으로 본국의 부인이나 자녀 등을 초청한 1980년 한 해 동안 독일 내 터키인은 약 200,000명 증가하였다. 80년대 중반 이후에도 독일 거주 터키인의 수는 1982년 1,580,000명에서 2001년 2,100,000명으로 늘어났으며, 독일 내 터키계 무슬림 공동체의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¹⁸⁶ 현재 독일에는 「이슬람 문화중앙회(Islamisches Kulturzentrum)」 또는 「문화연맹(Kulturverein)」으로 불리는 이슬람 사원 공동체들과 약 30여 개에 달하는 모스크들이 활동하고 있다.¹⁸⁷

나. 독일의 이슬람 이민자 적응 문제와 이민자 갈등

1980년대 중반 이후 독일 사회에서도 외국인 이민자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다. 특히 양 진영을 대표하던 동·서독이 통일된 후 외국인 이민자, 특히 무슬림 이민자와 이들의 사회적 통합 문제에 관한 논의는 한층 더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른바 “외국인문제(Ausländerfrage)”가 부각된 배경에는 8백만 명 이상을 헤아리는 외국인들의 수, 장기간 지속되는 경기침체 1991년 통일 후 야기된 여러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문제들, 그리고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확산 등이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¹⁸⁸

183 Moritz Orendt, "The Integration of the Turks into German Society: Turks on Their Way to Parallel Societies or to True Integration?", *Bilge Strateji*, Cilt 2, Sayı 3, (Güz 2010), pp. 165-192.

184 Faruk Sen, *op. cit.*, p. 76.

185 https://en.wikipedia.org/wiki/Turks_in_Germany (검색일: 2019. 10. 30).

186 박규정, 앞의 글, pp. 141-142.

187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mosques_in_Germany (검색일: 2019. 10. 30).

188 이철용, 앞의 글.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인 국가 중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도 독일 정부는 “독일은 이주국가가 아니다(Deutschland ist kein Einwanderungsland)”라는 원칙을 상당 기간 고수하였다.¹⁸⁹ 독일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독일이 무슬림 이민자 통합에 있어서 차별적 배제정책을 유지하는 기초로 작용하게 된다.

독일은 이미 앞서 살펴본 영국·프랑스와 마찬가지로 1970년대에 많은 수의 이민자들이 거주하는 국가로 변모되었으며, 터키계를 포함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유럽 국가가 되었다. 독일 정부는 독일 사회에 정착한 이주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을 본국 귀환의 대상으로 간주했기에 정부 차원의 이민자 통합정책은 수립되지 않았고, 이민자들의 귀국을 목표로 한 차별적 배제정책을 진행하였다.¹⁹⁰

특히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적 배제가 체계화된 대표적인 예는 독일의 학교 교육을 들 수 있다. 1970년대 많은 이민자의 자녀들인 이민자 1.5세대 및 2세대들이 독일의 학교에 입학하자 교육 당국은 그들이 독일에 체류하는 동안의 일시적 통합조치와 본국으로의 귀환을 독려하는 이중전략을 구사하였다.¹⁹¹ 그러나 외국인 고용 및 초청 중단 조치 이후에 이주 노동자의 본국 귀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독일 정부는 그 목

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하였다.

게다가 가족재결합과 자녀 출산 등으로 1974년부터 1981년 사이 무슬림 남성 이민자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무슬림 여성 이민자와 15세 이하 자녀의 수는 각각 12%, 52%로 증가했다.¹⁹² 그러나 지금까지 독일에 정착한 무슬림 이민자들과 그들의 2세대들은 독일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⁹³ 독일 사회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문화적 습관이나 전통을 경시하는 경향이 강하였기 때문에 독일 사회와 이민자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었다.

특히 이슬람을 믿고 있는 터키인들과의 문화충돌에서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⁹⁴ 특히 이민자 2세들의 언어능력 부족과 교육기회의 부족이 무슬림 이민자들의 독일 사회로의 통합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민자 2·3세대들이 언어능력 부족과 사회적·문화적 갈등으로 인해 독일 사회 적응이 어려운 경우 실업, 비행이나 범죄 등 사회문제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189 이철용, 「독일의 문화전쟁과 이민자 문제」,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7권 제1호 (2007), p. 322.

190 박재영, 앞의 글.

191 독일학교에서의 국민학급(national class), 준비학급(preparatory class)과 모국어 학급(mother-tongue class) 구분과 독일학생과 외국인 학생의 분리교육은 결국 외국인 학생들이 성공적인 교육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사회복지 차원의 기본적인 이주민에 대한 지원정책도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종교단체와 사회복지단체에 기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역할을 제한했으며, 기본적인 사회적 서비스 및 주거관련 문제들은 개별 고용주들이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Stephen Castles & Mark J. Miller, *op. cit.*, p. 213.

192 외국인노동자의 정착과 가족재결합으로 독일의 이주민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은 이민자 공동체의 형성이다. 체류가 장기화되면서 영구 정착으로 연결되자 이민자들의 조직화가 이루어졌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는 터키인 조직들의 형성이다. 초기 무슬림 공동체로서의 특징을 가졌던 이들 조직들은 점차 사회적·정치적 권리의 획득을 목표로 설정하고 활동하고 있다. *Ibid.*, pp. 79-80.

193 Dietrich Weiss, "Ausländische Mitbürger in Hildesheim - Intergrationsprobleme und Intergrationshilfe", *Hildesheim* (2005), p. 15. 한국이슬람학회 재인용.

194 Rainer Dollase & Kai-Christian Koch, "Die Intergration der Muslime",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40-41 (2006), p. 23.

다. 독일의 이슬람 문제와 히잡 갈등

독일 무슬림 이민자의 경우 문화적 충돌과 대립의 양상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¹⁹⁵ 이슬람의 전통과 생활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터키계 무슬림 이민자들과의 문화충돌은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독일 역시 히잡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현재 독일의 무슬림 이민자 여성들은 종교적 전통에 따라 히잡을 착용하는데, 히잡 착용은 본인의 종교적 신념을 표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독일 사회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문화충돌로 연결되기도 한다. 1998년 바덴-뷔르템베르그 州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출신 초등학교 교사 페레슈타 루딘(Fereshta Ludin)이 히잡을 착용하고 학교에서 수업했다는 이유로 루딘의 교사 자격을 박탈한 사건이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¹⁹⁶

바덴-뷔르템베르그 州 정부가 루딘의 교사 자격을 박탈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히잡은 이슬람의 종교적 상징물로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학교 측은 히잡 착용이 독일 공

무원의 신분으로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후 루딘은 법원에 소송을 냈으며, 독일연방행정법원은 개인의 종교적 자유보다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이 우선하기 때문에 학교 측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¹⁹⁷

루딘은 이 사건을 연방헌법재판소에 항소하였으며, 2003년 9월 헌법재판소는 “히잡은 종교적 상징물로 볼 수 없으며, 개인의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히잡 착용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다면 히잡 착용교사의 해고는 가능하다”고 판결하였다.¹⁹⁸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10개의 州 정부는 「히잡법」을 제정해 공립학교에서 교사가 히잡을 착용하고 수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에른처럼 보수적인 주에서는 교사의 히잡 착용을 금지하면서도 기독교의 상징물은 허용하고 있다. 기독교는 독일의 국가이념과 헌법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¹⁹⁹ 히잡 착용처럼 이슬람의 종교적인 전통과 관습에 대한 이해 부족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독일 사회가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갈등은 불가피하게 사회통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독일 사회에서의 서로 다른 종교적 가치관 및 세계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의 극복은 독일사회의 안정과 이민자 통합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하지만 독일의 터키계 무슬림 이민자의 사회통합 문제는 종교적인 이유에서만 문제시되는 점이 아니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 2006년 1월부

195 오늘날 독일에서 무슬림을 믿고 있는 외국인인 약 3,200,000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중 2,500,000명이 터키인이고, 약 164,000명이 보스니아, 그 밖에 약 89,000명이 이란과 소수민족으로 파악된다. Frank Jessen & Wilamowitz-Moellendorf, "Das KopftuchEntschleierung eines Symbols?", Konrad-Adenauer Stiftung, e. V.(ed.), Zukunftsforum Politik, Nr. 77, Sankt Augustt, Berlin (2006), pp.5-6, 박재영 앞의 글 (2008) 재인용.

196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독일 지방정부가 관련법을 마련할 법적 준거를 마련해 주었지만, 법해석상 상당한 논쟁의 여지를 남기면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였다. 무슬림 여성의 히잡 착용에 대한 독일사회의 논의에 대해서는, Heide Oestreich, Der Kopftuchstreit: Das Abendland und ein Quadratmeter Islam, Frankfurt a. M., Brandes & Apsel, 2005 참조(박재영, 재인용). 국내 논문은 신원경, "히잡 논쟁"을 중심으로 본 독일과 이슬람의 문화 갈등", 『아랍어와 아랍문학』 제12권 2호 (2008), pp. 307-334.

197 이철용, "독일: 히잡의 재발견", (2009), pp. 235-236.

198 조희선, 앞의 글.

199 Newsweek, "Why Southern Germany Has Declared War on Burqas and Muslims", (2017. 8. 7), 검색일: 2019. 10. 10.

터 바덴 - 뷔르템베르그 州정부는 이른바 ‘무슬림 테스트’라고 불리는 국적취득 심사시 설문지를 통한 인성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 심사의 설문 내용은 주로 서구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²⁰⁰ 그러나 이 설문이 문제시되는 것은 설문 대상이 이슬람 국가 출신 외국인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과 설문 내용이 설문 대상자에게 이슬람의 문화와 종교를 비하하는 느낌을 주는 데 있다.²⁰¹ ‘무슬림 테스트’에 내포되어 있는 반인권적 요소와 「독일 기본법(Grundgesetz)」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차별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바덴 - 뷔르템베르크 州정부는 이 테스트가 독일 국적 신청자들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독일사회에 통합되는데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²⁰²

이러한 사건과 논쟁들은 독일에서 주류사회와 이슬람이라는 서로 다른 두 문화권 사이의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그러나 독일 내 무슬림 이민자와 이민자 2·3세대들이 독일 사회에 동화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동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다 중요한 문제이다. 무슬림 이민자 2·3세대의 문화적 정체성의 혼돈과 사회 부적응은 독일의 이민자 통합정책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200 박재영, “유럽 다문화사회의 문화충돌: 영국·프랑스·독일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1호 (2008), pp. 107-138.

201 BBC, “German ‘Muslim Test’ Stirs Anger”, (2006. 2. 10), 검색일: 2019. 9. 18.

202 박재영, 앞의 글, pp. 107-138.

2. 독일의 급진 이슬람주의 대응과 대테러 정책

가. 독일의 대테러 체계

독일의 대테러관련 정보기관들은 수직적 지휘관계가 아닌 대등·병렬적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은 「대테러정보법(ATDG)」에 근거하여 대테러정보는 정보기관이 아닌 수사기관인 연방범죄수사청(BKA)에서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연방경찰청은 철도·국경·공항·기동경찰을 지원하는 임무를 담당하며 대테러 특수부대인 GSG9을 운용하고 있다. 독일의 주요법률 및 조직체계는 [표 3]과 같다.

독일의 대테러 체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강력한 테러대응에 대한 법적 근거를 수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테러정보법(ATDG)」, 「연방범죄수사청법(BKAG)」, 「연방헌법보호청법(BVerfSchG)」, 「연방정보국법(BNDG)」 등을 제정하여 테러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명문화하고 있다. 둘째, 합동테러대응센터(GTAZ)의 활동 방식이다. 합동테러대응센터에는 연방범죄수사청(BKA)·연방헌법보호청(BfV)·연방정보국(BND)·군사정보국(MAD)·세관·연방이민청 등 40여 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때 합동테러대응센터의 활동은 특정 기관 주도 방식이 아니라 각 참여 기관의 권한 범위 내 자율적 협력체로서 9개의 TF팀 구성 및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합동테러대응센터 내 각 유관기관은 수평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정보와 수사를 분리시킨 이원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또한 테러예방과 관련된 역할은 경찰기관이 담당하며, 대테러 관련 업무 수행시 경찰기관과 정보기관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협력한다. 실제 테러예방 활동은 연방범죄수사

청(BKA) 등 집행권을 가진 경찰의 임무로 규정되고 있다. 넷째, 연방법 죄수사청(BKA)은 「기본법」에 규정된 국가안보와 관련된 특정한 분야만 취급하고 기본적인 경찰업무는 주(州)범죄수사청(LKA)에서 담당한다.²⁰³

[표 3] 독일의 주요법률 및 조직체계

구분	법률 및 조직체계	비고
법적 근거	형법 및 형사소송법	형법 제129a조 제1항에 따르면 살인·상해치사·대량학살, 요인납치 등 인신의 자유를 구속하는 죄, 방화, 폭발물 소지, 핵물질 사용, 인신공격, 철도파괴, 항공교통법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체 또는 조직을 구성하거나 참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형사소송법 제98조a(테러협박자의 경우 도주 우려 없이도 구속 가능, 거주지에 대한 영향 없는 수색허용, 휴대폰 검색, 지문채취, 사진촬영 등 필요한 조치허용) 테러자금 관련 범죄처벌 및 테러자산 동결허용
	연방법죄수사청법(BKAG)	제4a조 제테러방지 임무, 제20a조에서 검문, 수색, 감청 등 테러방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권한 규정
	연방헌법 보호청법	제3조에 의거 대테러정보를 포함한 국내정보 수집, 제18조에 의거 유관기관들과의 대테러정보 교환
	연방정보국법	국제테러관련 정보를 포함한 국제정보 수집
	대테러정보법	대테러 38개 유관기관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를 통한 효과적인 테러 대응을 목적으로 개인 및 테러단체의 주소, 금융정보, 전화, 이메일 등 공유
정책 기구	내무부	대테러 업무조정
주무 기관	연방법죄수사청 (BKA)	BKA는 연방내무부 산하 외청으로서 대테러정보법에 따라 연방·주(州)의 36개 테러대응 유관기관의 대테러정보는 정보기관이 아니라 경찰기관인 연방법죄수사청에서 시스템 관리

구분	법률 및 조직체계	비고
테러정보 통합 기구	합동 대테러 방지센터 (GTAZ)	연방법죄수사청, 연방헌법보호청, 연방정보국, 군사정보국, 세관, 연방이민청 등 40개 기관 참여 연방법죄수사청과 연방헌법보호청이 추가 되어 각 기관들의 권한범위 내에서 자율적 정보교류 협력체로 9개의 TF팀(테러관련 일상정보, 위험평가, 정보교류, 이슬람 테러사례 분석, 이슬람 테러 가능성 분석, 국제정세 등)을 운영 합동테러대응센터 내 각 관계기관의 수평적 협력관계 유지, 정보와 수사 이원화 구조이나 테러방지와 관련된 역할은 경찰 담당
	합동 극단주의 테러방지센터 (GETZ)	독일 내 극우주의자 및 극좌주의자, 외국인 등에 의한 국내테러 방지를 위해 2012년 11월 설립 연방법죄수사청, 연방헌법보호청, 연방정보국, 세관·연방이민청 등 참여 GTAZ와 마찬가지로 독자 기관이 아닌, 테러관련 정보교류를 위한 협력체로 연방법죄수사청과 연방헌법보호청 주도 7개 TF팀(사례분석, 위험성 평가, 정보교류 등) 운영
수사 기관	연방 범죄수사청 (BKA) 연방검찰청 국경수비대	연방법죄수사청은 테러의 예방·진압관련 종합지원센터 역할을 수행(기본법에 규정된 국가안보 관련 특정분야 취급) 기본적인 경찰업무는 주(州)범죄수사청(LKA)에서 담당, 연방법죄수사청과 협력 또는 긴급상황에 대응하여 독자적으로 대테러업무 수행
정보 기관	연방 헌법보호청 (BfV) 연방정보국 (BND) 군정보국 (MAD)	연방헌법보호청은 내무부 장관 소속으로 테러의 범주에 정치적 목적, 조직적 활동, 형법 129a조에 규정된 중대 범죄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연방헌법보호청은 정보기관으로 수사권이 없기에 테러 관련 정보가 형법 129a조에 규정된 중대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관련정보 이첩 및 수사 협력 연방정보국은 총리실 직속의 해외정보기구로 국제통화에 대한 도청, 전자감시, 정보수집·평가·생산 군정보국은 군 방첩공작활동, 군 관련 정보수집과 분석, 적대국에 대한 비밀활동 등 수행

출처: 권오국·김윤영, “국제사회의 테러리즘 동향과 국내 테러대응체계 및 시사점 분석,” 『통일문제연구』, 제29권 제1호 (2017), pp.175-178.

나. 독일의 급진 이슬람주의 대응과 대테러 정책

독일은 급진 이슬람주의 대응을 위해 테러 및 테러 관련 범죄를 저지른 급진화된 개인을 효과적으로 기소하는 정책과 급진 이슬람주의에 경도된 개인들이 테러공격을 자행하기 전 예방하는 정책이라는 이중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2009년 독일합동대테러 센터 내 급진 이슬람주의에

203 권오국·김윤영, “국제사회의 테러리즘 동향과 국내 테러대응체계 및 시사점 분석,” 『통일문제연구』, 제29권 제1호 (2017), pp. 178-179.

대응하는 연성조치를 위한 실무그룹을 설립하여 급진 이슬람주의의 예방 및 연성조치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대테러 정책을 수립하였다. 급진 이슬람주의 예방 프로그램을 위해 독일 연방정부 차원에서 연간 1억 유로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급진 이슬람주의 프로그램은 연방 및 주 단위에서도 실행되고 있다. 특히 교도소에서의 급진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기에 교도소 및 보호관찰 대상자를 중심으로 연방공민교육국(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에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²⁰⁴

급진 이슬람주의 예방 및 연성조치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적극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2년 독일 이민난민청(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내 「급진주의 상담센터(Advice Centre on Radicalisation)」를 개소하였다. 동 센터에서는 급진화 경향이 있는 개인의 가족이나 친구, 교사 또는 본인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핫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상담대상은 ISIS 가입을 위해 중동으로 떠난 외국인 테러전투원의 남겨진 가족들과 과거 ISIS 등 가입을 시도했거나 향후 시도 가능성 등의 위협에 있는 대상들과 대상의 가족들이다.²⁰⁵ 전문적 훈련을 이수한 상담직원들이 내담자의 상황을 진단 및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²⁰⁶

또한 동 센터에서는 급진 이슬람주의와 관련된 위험징후들의 조기 탐지를 위해 관련 자료를 제작하여 교사나 관련 담당 공무원,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배포한다. 그리고 급진 이슬람주의 예방을 위한 위험감지와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교육 및 육성한다. 더불어 이러한 상담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분석 작업 역시 진행하고 있다.²⁰⁷

민간협력 가운데 ISIS가 급진 이슬람주의 지지자들에게 “무술을 배워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하드에 참전하거나,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의 지하드를 준비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독일어권 무술학원 연합(Deutscher Verband der Kampfsportschulen gegen Extremismus, DVKE)」도 연성 조치의 중요한 협력 대상이다.²⁰⁸

현재 독일에서 급진 이슬람주의 대응정책상 중요 초점은 시리아 내전에 참가하였던 외국인 테러전투원 귀환 가능성과 시리아에서 출생한 ‘ISIS의 신부와 아이들’이다. 특히 시리아 내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떠난 독일 국적의 외국인 테러전투원의 귀환에 대비하여 그들의 이동경로 파악과 기소를 위하여 효율적인 형사사법공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4 Stefan Uecker, “Statement by Gemnay presented to High-Level Conference of Heads of Counter-Terrorism Agencies of Member States”, (June 29, 2018).

205 윤민우, “폭력적 극단주의 급진화에 대응한 프로파일링의 필요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행동과학적 접근에 대한 논의: 정보활동의 패러다임의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 『국가정보연구』 제9권 2호 (2016), pp. 161-186.

206 <http://www.bamf.de/EN/DasBAMF/Beratung/beratung-node.html> (검색일: 2019. 9. 24).

207 윤민우, “폭력적 극단주의 급진화에 대응한 프로파일링의 필요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행동과학적 접근에 대한 논의: 정보활동의 패러다임의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 『국가정보연구』 제9권 2호 (2016), pp. 161-186.

208 <http://girds.org/projekte/der-deutsche-verband-der-kampfsportschulen-gegen-extremismus-dvke> (검색일: 2019. 9. 24).

VI

결론 및 한국에의 시사점

1. 결론 및 급진 이슬람주의 대응방향
2. 한국에의 시사점

1. 결론 및 급진 이슬람주의 대응방향

가. 연구내용의 요약 및 결론

9/11 테러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급진 이슬람주의에 기초한 자생테러와 이민자 폭동사태는 무슬림 이민자들과 유럽 주류 사회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연구대상으로 삼았던 인종적·종교적 갈등과 테러, 소요사태 등을 경험한 유럽 국가들에서 제시하는 이민자 통합정책은 다문화주의 정책과 이민자의 사회적 동화를 염두한 통합정책의 병용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과거 프랑스는 전통적인 동화정책을 이민정책으로 채택하였으나, 이제는 전통적 동화정책과 프랑스 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문화정책이 병용되는 방향으로 이민자 통합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이민자의 프랑스 국적취득이라는 수단을 통해 동화정책을 추구하는 동시에 지금까지의 취했던 이슬람 문화에 대한 철저한 공적 배제의 입장을 철회하여 이슬람 대표기구들을 조직화하고, 이들 조직과의 협의를 제도화함으로써 프랑스 내 무슬림 공동체의 안정과 사회통합을 모색하고 있다.

영국은 7/7 런던테러 이전까지는 인종평등 정책에 입각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기회의 평등”이라는 다문화주의의 원칙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다문화주의가 다양한 문화의 공존에는 기여했으나 소속감에 관한 공통인식을 형성하는데 한계를 보였기에 통합정책이 제시되었다. 통합정책의 구체적인 지침으로는 다문화 영국과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되, 이민자들이 영국이 중요시 여기는 국가적 가치들과 영국적 가치들을 공유할 것이 강조되고 있다.

독일 역시 기존에 취했던 무슬림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적 배제정책을 폐기하고, 다문화주의와 동화정책을 병용하는 정책으로의 전환되고 있다. 독일도 이제는 이민국가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이민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통합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민자의 독일 주류사회 통합 및 정주 지원을 중심으로 이민자의 생활능력과 주거환경 개선, 지역의 네트워크화가 핵심적이다. 특히 독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슬림 이민자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은 '다원적 통합'이라기보다는 국적법과 이민법을 통해 독일 주류사회로의 이민자 편입을 목적으로 하는 점이 특징이다.

나. 유럽의 급진 이슬람주의 대응방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주요국가의 이민자 통합정책이 다문화주의 정책과 동화를 염두한 통합정책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영국의 파키스탄계, 프랑스의 북아프리카계, 독일의 터키계 등 무슬림 공동체의 조직화와의 깊은 관련이 있다.

비록 유럽의 주요국이 테러 및 폭력사태 등 이민자 갈등과 중요한 관계가 있는 급진 이슬람주의에 대응하기 위하여 무슬림 이민자 통합정책을 시행하고 무슬림 공동체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급진 이슬람주의의 확산을 가져오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럽 내 무슬림 이민자 2세·3세는 종교와 문화의 다양성 속에서 성장한 반면, 사회적 소외와 실업, 유럽 주류사회의 인종적 차별 등으로 인해 분리주의와 유럽적 가치에 대한 부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의 소수자

적인 위치와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을 급진 이슬람주의와 무슬림 공동체의 조직화에서 찾게 되는 것이다.

앞서 2장에서 논의된 급진 이슬람주의의 영향요인을 고려하였을 때, 급진 이슬람주의에 대한 대응은 흡인 요인과 배출 요인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법이 요구된다. 테러공격에만 초점을 맞추는 기존의 대테러 활동은 정부 주도적이며, 대응 방식 또한 정치적·군사적·경제적 대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테러 활동의 주요 내용 또한 테러단체 요인 및 은신처 타격, 테러범의 이동 차단 및 국경통제의 강화, 테러범에 대한 처벌, 그리고 테러자금원과 장비제공의 차단 및 테러가 발생하는 분쟁지역의 안정화 등이 해당된다.²⁰⁹ 그러나 기존의 대테러 정책만으로는 오늘날 유럽이 경험하는 급진 이슬람주의 및 급진 이슬람주의에 기반한 자생테러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이 미비하게 된다.

따라서 급진 이슬람주의와 급진 이슬람주의에 기반한 테러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범한 무슬림 이민자 개인이 경험하는 정치적·사회적 행위와 맥락을 소수자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급진 이슬람주의가 출현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와 정치적 맥락 및 개인의 노출 정도의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²¹⁰

따라서 유럽에서는 급진 이슬람주의 대응을 급진 이슬람주의의 확산을 조장하는 환경 개선을 위한 총체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종교, 교육, 기업, 시민사회 등이 모두 참여하는 쉐사회적 대응이

209 이규범·박보라, "미국 경찰의 급진주의 대응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6권 제2호 (2017), pp. 127-150.

210 European Parliament, *Preventing and Countering Youth Radicalisation in EU* (Brussels.: European Parliament, 2014)

라는 것이다.²¹¹ 특히 급진주의에 경도되어 폭력적 극단주의로 전환될 수 있는 사회적 소수집단과 취약계층의 주류 사회로의 통합이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다.²¹²

또한 무슬림 이민자 2세·3세들이 급진 이슬람주의에 경도되는 과정에서 무슬림 공동체의 영향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연성 조치에서 무슬림 공동체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슬림 공동체는 유럽이 급진 이슬람주의 대응정책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다. 영국의 대테러 정책인 「콘테스트」정책의 예방전략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무슬림 공동체를 주 대상으로 하는 급진 이슬람주의 대응프로그램은 오히려 무슬림에 대한 인종적 편견을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점을 받고 있다. 유럽에서 출생하고 유럽식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생 테러를 저지른 경우는 유럽 내 무슬림 이민자 전체 대비 소수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슬림 이민자를 잠재적인 테러범으로 전제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감시대상으로 삼아 오히려 무슬림 이민자에 대한 차별적 편견을 강화시켰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각국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급진 이슬람주의 대응정책이 오히려 무슬림 이민자의 통합보다는 범죄자 또는 테러범으로 낙인을 찍고, 주류 사회로부터 배제하여 오히려 급진 이슬람주의에 경도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양산하자는 것이다.²¹³

또한 급진 이슬람주의 대응정책은 유럽의 무슬림 이민자가 자신의 종교와 관련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²¹⁴ 또한 ‘급진 이슬람주의 경향이 의심스러운 경우’에 대한 주변인의 신고 등이 강조되는 만큼 무슬림 이민자에 대한 의심 및 일상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찰과 지역사회의 친밀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일상적인 순찰을 통해 잠재적인 급진 이슬람주의자 및 급진주의 조직을 파악하게 될 경우, 과도한 법집행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다.²¹⁵

2. 한국에의 시사점

국내 무슬림 인구는 2018년 기준 전국 150,000~200,000명 선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집계 주체(법무부, KMF 등)에 따라 추산치에 차이가 있다. 다만 국내 이슬람학계에서는 150,000명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합당한 추론에 가깝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²¹⁶

출신국가별로 살펴보자면 우즈베키스탄 출신 무슬림이 68,433명, 인도네시아 출신 무슬림이 약 40,000명이며, 그 뒤로 카자흐스탄, 방글라

211 United Nations, 62/272: *The United Nations Global Counter-Terrorism Strategy* (United Nations, 2008) ; United Nations, *Plan of Action to Prevent Violent Extremism* (United Nations, 2016).

212 Margarita Bizina & David H. Gray, "Radicalization of Youth as a Growing Concern for Counter-Terrorism Policy", *Global Security Studies*, Vol. 5 No. 1 (2014), pp. 72-79.

213 BBC "Prevent extremism strategy 'stigmatising', warn MPs". (2010. 3. 30), 검색일: 2019. 8. 23.

214 *The Guardian*, "Prevent gives people permission to hate Muslims - it has no place in schools", (2016. 4. 4), 검색일: 2019. 8. 23.

215 *The Guardian*, "Police challenge Prevent critics to 'stand up and be counted'", (2019. 2. 5), 검색일: 2019. 10. 27.

216 이와 관련된 사항은 연구보고서 자문회의에서 파악한 내용임.

데시, 파키스탄 등지 출신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²¹⁷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국내에 합법적인 체류 중인 외국인의 출신국가 가운데 5위에 위치할 정도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만 하다.²¹⁸ 국내 무슬림의 체류자격을 살펴보면 외주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수 유학생이나 사업·투자자도 존재한다. 국내 무슬림 인구의 성비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약 8:2로 남성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외주 노동자 중심의 인구구성에 따른 결과이다.

국내 무슬림 이민자의 체류자격상 특징은 국내 거주 지역 분포에도 영향을 미친다. 서울·경기 및 경상권을 중심으로 전체 무슬림 인구의 약 70%가 생활하고 있다. 서울·경기 지역과 경상권 지역은 거의 비슷한 비율로 무슬림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거주 지역에 따라 체류 자격은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서울·경기 지역은 이주 노동자 외 유학생과 사업·투자자가 상당수 분포하지만, 경상권 지역은 이주 노동자가 다수를 구성하고 있다. 충청권과 전라권 지역을 합치면 국내 무슬림 인구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며, 강원권과 제주권에는 극히 소수의 무슬림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이는 산업 단지 및 농·공업 단지가 발달한 지역과 일치하는 결과로 직업적 요인에 따라 거주 지역이 선택되는 결과라 하겠다. 또한 이주 노동자와 유학생의 거주 지역에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며 계층간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한국의 무슬림 사회가 갖는 고유한 특징으로 지적된다.

217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모두 약 10,000명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다.

218 국내에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은 중국(조선족 포함)이 1,070,566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태국(197,764명), 베트남(196,633명), 미국(151,018명) 순의 인구구성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www.moj.go.kr/> (검색일: 2019. 9. 24).

무슬림 종파를 살펴보면, 국내 무슬림 사회에서도 다른 이슬람 세계와 마찬가지로 순니파와 시아파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종파적 구분으로 공동체가 형성되기보다는 출신 국가에 따라 공동체가 형성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 점 역시 한국의 무슬림 사회가 갖는 고유한 특징이다. 국내 무슬림 공동체 가운데 인도네시아 공동체가 가장 큰 규모이며, 파키스탄 공동체가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 공동체 모두 순니파가 다수이며 소수 시아파가 존재하기도 한다. 소수 시아파의 경우 경기와 대구 지역에 두 군데 거점이 위치하며, 국내 시아파의 경우 파키스탄 출신 무슬림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아랍 국가 출신, 방글라데시 등이 뒤를 잇고 있다.

국내 무슬림의 활동 근황은 종교적 행사를 중심으로 일반 대중에게 노출되고 있다. 지난 9월 9일 대구에서 시아파 무슬림 아슈라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약 500m의 가두행진과 실내 모스크 예배가 진행되었다. 약 50여명의 무슬림이 모였고, 해당 지역 경찰의 관리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²¹⁹ 9월 12일에는 경상권에서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들의 명절 맞이 행사가 열려 주최 측 추산 2,000명 가량 모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 무슬림 공동체는 앞서 살펴본 프랑스나 영국, 독일처럼 조직화된 형태의 종교적 공동체라기보다는 주로 출신국가별 공동체 단계에 해당되며, 그 조직화의 정도도 이민자 정착 지원을 위한 수준의 초기단계로 여겨진다.

다만 국내 거주 무슬림 이민자들과 내국인들이 경험하는 이민자 갈등 사항은 유럽과 달리 눈에 띌 정도로 큰 갈등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다

219 매일신문, "대구 상리동에서 이슬람 시아파 무슬림 지도자 추모 행사", (2019. 9. 9).

만 생활적인 영역에서 소규모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배시 발생하는 생활 소음에 대한 민원이나, 다수의 외국인이 모이는 데서 오는 불안감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다문화 가정 어린이로 인하여 초등학교 급식문제(할랄푸드 공급)와 같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²²⁰

프랑스, 영국, 독일이 경험한 무슬림 이민 역사와 공동체 형성, 이민자 갈등과 우리의 무슬림 이민 역사 및 현황을 비교하여 우리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의 사례처럼 급진 이슬람주의의 확산을 가져오는 근본적인 원인이 한국에도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이민자 통합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프랑스, 영국, 독일의 사례에서 주류 사회가 갖는 무슬림 이민자에 대한 거리감 및 이슬람 포비아는 무슬림 이민자의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유도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유럽 내 무슬림 이민자 2세대·3세대가 성장한 환경적 다양성에 비해 사회적 소외와 실업·인종차별 등 문제는 유럽적 가치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급진 이슬람주의에 경도될 가능성이 있는 불만 있는 개인들을 양산하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소수자에 보이는 사회적 거리감 및 배제 태도 또한 한국에서의 급진 이슬람주의가 출현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지난해 1월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 및 발표하였다. 동 행동계획은 △대화 및 인권증진 △공동체 관여 △청소년 및 여성의 역할 강화 △교육·훈련과 고용촉진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전략적 소통이라는 5대 분야와 각 분야에 행동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폭력적 극단주의가 발전되는 주요 배경에 급진 이슬람주의 등 급진주의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서 논의하였다. 앞으로 동 행동계획의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유럽적 맥락과 비교하여 한국적 맥락에서 급진 이슬람주의 영향요인 확인과 反급진주의적 내러티브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대상으로 삼은 프랑스, 영국, 독일 모두 무슬림 공동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급진 이슬람주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논의한 우리의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또한 ‘공동체 관여’를 통해 극단주의가 계발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한다. 국내 무슬림 인구 현황 및 공동체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고유한 특징이 몇 가지가 발견된다. 첫째, 종파별 공동체보다는 국가별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과 둘째, 국내 직업군별 교류가 활발하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급진 이슬람주의 대응책 개발시 이슬람 국가별 맥락을 고려한 개별적 관여 프로그램과 공동체 차원에서 한국적 가치에 우호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20 뉴스스, "광주 이슬람 출신 일부 초등생, 할랄식품 없어 점심 걸러", (2019. 8. 12).

Abstract

Religious Radicalization and Homegrown Terrorism in Europe: Cases of France, United Kingdom and Germany

Park, Bora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 recent years, Europe has been the main stage of terrorist attacks based on radicalization or Salafi-Jihadism. London 7/7 terrorist attacks raised issues of homegrown terrorism and the Muslim immigrants and the Muslim communities in Europe became a focal point of counter-terrorism policy in Europe. The fact that the self-motivated terrorists were ordinary individuals without explicit sign of terrorists brought attention to what leads the Muslim immigrants to radicalization and violent extremism, and how to integrate them into a mainstream society in European countries. Among the immigrants in Europe, Muslim immigrants, in particular, are considered to be the most difficult to integrate into European mainstream. Muslims' way of thinking and lifestyle deeply rooted in their own traditions and religions is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Western Europe, and they adhere to their religions and cultures and stubbornly reject changes in existing manners. After 9/11, Muslim immigrants' riots and homegrown terrorist attacks in Europe showed how serious the conflict between the Muslim immigrants and the mainstream society. If the approach to this type of conflict is mainly focused on the religious and cultural aspects, it would be criticized by overly simplifying the matter. For these reasons, this report tried to approach the radicalized Muslim immigrants in Europe as a minority problem. It also analyzed how the Muslim immigrants were separate from mainstream society, experienced immigrant conflicts, and explored the root causes of radicalization and homegrown terrorism in the perspective of minority issues. Based on the findings, it suggested policy recommendations for countering radicalization and implications for Korea in the future.

Keywords

Religious Radicalization, Violent Extremism, Homegrown Terrorism, Muslim Immigrants' Conflict, Muslim Community

참고문헌

1. 국내문헌

단행본

- 박단. 『프랑스의 문화전쟁 - 공화국과 이슬람』. 책세상, 2005.
- 서정민. 『이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서울: 시공사, 2016.
- 이운호. 『범죄학』. 서울, 박영사, 2015.
- 이태숙 · 김종원 엮음. 『서유럽 무슬림과 국가 그리고 급진이슬람주의』. 서울: 아모르문디, 2009
-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21세기 정치학대사전』.
- 한국이슬람학회. 『세계 속의 이슬람』. 청아출판사, 2018.

학술논문

- 강봉구. “글로벌 지하드”, 『한국정치학회보』 제36권 4호 (2002).
- 권오국·김윤영. “국제사회의 테러리즘 동향과 국내 테러대응체계 및 시사점 분석”, 『통일문제연구』 제29권 1호 (2017).
- 김남국. “영국과 프랑스에서 정치와 종교 - 루시디 사건과 헤드스카프 논쟁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4집 제4호 (2004).
- 김미성. “이주민문화의 충돌과 융합: 프랑스의 문화정책을 중심으로”, 『유럽사회문화』 제2권 (2009).
- 김민정 · 홍지영. “서유럽 극우정당 지지 동기 분석”, 『국제정치논총』 제52집 2호 (2012).
- 김승민. “프랑스 이민통합의 실패 원인: 프랑스사회 책임 혹은 이민자책임”, 『유럽연구』 제31권 1호 (2013).
- 김성진. “유럽의 이주갈등: 경제 · 사회정책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이론』 47호 (2015).
- 김수행. “영국의 제노포비아 현상에 대한 연구”, 김세균 편, 『유럽의 제노포비아』. 문화과 학사, 2006.
- 김용찬. “서유럽국가 이주민 통합거버넌스 연구: 영국과 프랑스의 무슬림 통합정책과 거버

넌스”, 『평화학연구』 제12권 4호 (2011).

- 김종원. “유럽연합과 유럽의 무슬림”, 『서유럽 무슬림과 국가 그리고 급진이슬람주의』. 서울: 아모르문디, 2009.
- 김진아.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원칙 따라 이행계획 수립: 테러리즘과 한국의 대비방향”, 『국방저널』 (2015).
- 김태우. “19대 국회, 대테러법 끝내 외면하는가,” 『국가미래연구원 ifs POST』 (2018).
- 김현주. “프랑스의 북아프리카 출신 대상 이민 · 사회통합정책의 위기와 테러 환경”, 『한국아프리카학회지』 제53집 (2018).
- 문지영.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사이에서: 프랑스의 이민자 통합정책”, 『다문화사회연구』 제2권 1호 (2009).
- 박규정. “독일 사회와 무슬림 터키 공동체”, 『서유럽 무슬림과 국가 그리고 급진이슬람주의』. 서울: 아모르문디, 2009.
- 박단. “프랑스: 공화국과 무슬림 이민자”, 『현대 서양사회와 이주민: 갈등과 통합 사이에서』. 서울: 한성대학교 출판부, 2009.
- 박단. “프랑스: 히잡사건”, 『현대 서양사회와 이주민: 갈등과 통합 사이에서』. 서울: 한성대학교 출판부, 2009.
- 박단. “탈식민화와 ‘새로운 프랑스 국민’: 알제리 전쟁 전후 알제리인의 프랑스 유입과 국적법 변화”, 『중앙사론』 46집 (2017).
- 박보라 · 장석현. “극단주의에 관한 연구: 극단주의 테러범의 심리를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4권 제1호 (2018).
- 박선희. “프랑스 안의 무슬림: 공화주의와 문화갈등”, 『국제관계연구』 제20권 제1호 (2015).
- 박선희. “프랑스의 대테러정책: 자생적 테러리즘과 대테러정책의 변화”, 『평화학연구』 제17권 3호 (2016).
- 박재영. “유럽 다문화사회의 문화충돌: 영국 · 프랑스 · 독일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1호 (2008).

- 서정민. “국내 폭력적 극단주의 위험 요인 분석”,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26권 제1호 (2016).
- 서정민. “문화갈등과 국내의 극단주의 인식”, 『한국중동학회논총』 제38권 제1호 (2017).
- 손주영. “중동인의 종교, 이슬람의 이해”, 국가안보정책연구소. 『중동의 새로운 이해』. 서울: 오름, 1999.
- 신원경. ““히잡 논쟁”을 중심으로 본 독일과 이슬람의 문화 갈등”, 『아랍어와 아랍문학』 제12권 2호 (2008).
- 윤민우. “폭력적 극단주의 급진화에 대응한 프로파일링의 필요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행동과학적 접근에 대한 논의: 정보활동의 패러다임의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 『국가정보연구』 제9권 2호 (2016).
- 윤민우. “인도네시아 이슬람 극단주의 실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50호 (2017).
- 윤민우.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세력의 기원과 전략적 특성, 그리고 최근 동향에 관하여”, 한국위기관리재단 홈페이지 (www.kcms.or.kr).
- 이규범 · 박보라. “미국 경찰의 급진주의 대응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6권 제2호 (2017).
- 이동권. “최근 주요국의 테러대응책 동향과 시사점”, 『안보팩트』, 2018.
- 이만중. “경찰의 테러대응체계 법제에 관한 고찰”, 『한국테러학회보』 제7권 2호 (2014).
- 이영석. “빅토리아 후기 영국 사회와 유대인 문제”, 『영국연구』 12호 (2004).
- 이진영. “이민과 안보 및 안전”, 이혜경 · 이진영 · 설동훈 · 정기선 · 이규용 · 윤인진 · 김현미 · 한건수. 『이민정책론』, 박영사, 2016.
- 이철용. “독일의 문화전쟁과 이민자 문제”,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7권 제1호 (2007)
- 이철용. “독일: 히잡의 재발견”, 『현대 서양사회와 이주민: 갈등과 통합 사이에서』. 서울: 한성대학교 출판부, 2009.
- 이태숙. “서유럽 무슬림 문제를 묻는 방식”, 『서유럽 무슬림과 국가 그리고 급진이슬람주의』. 서울: 아모르문디, 2009.
- 이혜경. “이민과 이민정책의 개념”, 『이민정책론』. 서울: 박영사, 2017.
- 정육상. “한국의 테러방지법 제정방향에 관한 연구: 외국의 입법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6호 (2009).
- 정상률. “마크디시의 살라피즘과 IS의 살라피 지하디즘”,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26집 1호 (2016).
- 정희라. “영국: ‘자유방임 이민국’에서 ‘제로 이민국’으로”, 『현대서양사회』. 2011.
- 조성권. “중동의 ‘알라의 전사들’”, 『중동의 새로운 이해』. 1999.
- 조희선. “영국, 프랑스, 독일 무슬림의 이주와 정착 및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 이주 무슬림과의 비교를 위하여”, 『한국중동학회논집』 제31권 제1호 (2010).

- 최재훈. “현대 이슬람원리주의의 정치세력화와 지하드론: 이집트 무슬림형제단과 급진주의 조직을 중심으로”, 『지중해지역연구』 제9권 제2호 (2007).
- 최재훈. “이슬람 급진주의와 지하드의 글로벌화”,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20권 제1호 (2010).
- 한명숙. “무슬림 공동체의 현황과 국적법”, 『인문학연구』 제10호 (2006).
- 한명숙. “프랑스 국적법 개정과 북아프리카 이민자 문제, 1986-1993”, 『프랑스사연구』 제20호 (2009).
- 한명숙. “1980년대 프랑스 국적법 논쟁을 통해서 본 무슬림 이민자 문제”,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18집 3호 (2008).
- 황병하. “아랍 스프링 이후 튀니지 극단주의에 대한 연구”, 『중동연구』 제 35권 2호 (2016).
- 황병하. “아랍 스프링 이후 사우디 이슬람 극단주의의 등장과 정부의 반테러 정책”, 『한국중동학회논총』 제37권 2호 (2016).
- 황병하. “사우디 내 IS 극단주의 확산과 와하비주의 논쟁, 그리고 사우디 정부의 대응”,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27권 2호 (2017).

2. 국외문헌

단행본

- Bartram, David, Maritsa Poros & Pierre Monforte, *Key Concepts in Migration* (London: SAGE, 2014).
- Benjamin Sotra et Emile Temime, *Immigrances*. Fayard, 2007.
- Castles, Stephen & Mark J. Miller, *The Age of Migration*.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2003.
- Comité Interministériel de Prévention de la Délinquance, *Guide Interministériel de Prévention de la Radicalisation*. Comité Interministériel de Prévention de la Délinquance, 2016.
- Geipel, J. *The Europeans: An Ethnohistorical Survey*. London, 1969.
- Hamm, Mark S. & Spaaij, Ramon. *The Age of Lone Wolf Terrorism*.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7.
- Joppke, Christian. *Immigration and the Nation-State: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Great Britain*. Clarendon Press, 2000.
- Layton-Henry, Zig. *The Politics of Immigration: Immigration, Peace and Race Relations in Post-War Britain*. Oxford, 1992.

- Leveau, Rémy & Khadija Mohsen-Finan(dir.). *Musulmans de France et d'Europe*. CEMOTI, 2005.
- Liver Blanc, *Defense et la Sécurité Nationale*. Paris, Direction de l'Information Légale Administrative, 2013.
- Martin, Gus. *Understanding Terrorism: Challenges, Perspectives and Issues*. Sage, 2013.
- Oestreich, Heide. *Der Kopftuchstreit: Das Abendland und ein Quadratmeter Islam*. Frankfurt a. M., Brandes & Apsel, 2005.
- Paul, Kathleen. *Whitewashing Britain: Race and Citizenship in the Postwar Era of Religi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 Rex, John. *Ethnic Minorities in the Modern Nation State*. London: Macmillan Press, 1996.
- Sageman, Marc. *Understanding Terror Network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4.
- Siegel, Larry. *Criminology: Theories, Patterns and Typologies*. Wadsworth, 2007.
- Snarr, Michael T. & Neil D. Snarr. *Introducing Global Issues*. Lynne Rienner Publishers, 2005.
- Soysal, Yasmin Nuhoglu. *Limits of Citizenship*.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94.
- Spencer, Ian R. G. *British Immigration Policy since 1939: The Making of Multi-Racial Britain*. London, 1997.
- Winter, Bronwyn. *Hijab and Republic: Uncovering the French Headscarf Debate*. Syracuse University Press, 2008.

학술논문

- Angus, Chris. "Radicalisation and Violent Extremism: Causes and Responses", *e-Brief* (February 2016).
- Bizina, Margarita & David H. Gray. "Radicalization of Youth as a Growing Concern for Counter-Terrorism Policy", *Global Security Studies*, Vol. 5 No. 1 (2014).
- Brady, Henry, Kay Schlozman & Sidney Verba. "Prospecting for Participants: Rational Expectations and the Recruitment of Political Activist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3 (1999).
- Cesari, Jocelyn. "Muslims in Europe and the Risk of Radicalism", in R. Coolsaet,

- ed. *Jihadi Terrorism and the Radicalisation Challenge in Europe*. Hampshire: Ashgate, 2011.
- Cook, Joana & Vale, Gina. "From Daesh to 'Diaspora' II: The Challenges Posed by Women and Minors After the Fall of the Caliphate", *CTC Sentinel*, Vol. 12 No. 6 (2019).
- Dalgaard-Nilsen, A. *Studying Violent Radicalization in Europe II: The Potential Contribution of Socio-psychological and Psychological Approaches*, Danis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2008.
- Dalgaard-Neilson, A. "Promoting Exit from Violent Extremism: Themes and Approaches", *Studies in Conflict & Terrorism*, Vol. 36 No. 2 (2013).
- Davies, G., C. Neudecker, M. Ouellet, M. Bouchard & B. Ducol. "Toward a Framework Understanding of Online Programs for Countering Violent Extremism", *Journal for Deradicalization*, Vol. 6 (2016).
- Dollase, Rainer & Kai-Christian Koch, "Die Intergration der Muslime",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2006.
- Dubois, Jean-Pierre et Driss El Yazami, "Hijab, Liberte et Laïcité", in Charlotte Nordmann, *Le Foulard Islamique en Questions*. Editions Amsterdam, 2004.
- European Commission, *Radicalisation, Recruitment and the EU Counter-radicalisation Strategy*. 2008.
- European Parliament, *Preventing and Countering Youth Radicalisation in EU*. Brussels: European Parliament, 2014.
- Hazely, Barry. "The Irish in Post-War England: Experience, Memory and Belonging in Personal Narratives of Migration 1945-69", *Ph.D Thesis*, University of Manchester, 2012.
- Hellmuth, Dorle. "Countering Jihadi Terrorists and Radicals the French Way", *Studies in Conflict and Terrorism*, Vol. 38 (2015).
- Home Office, *CONTEST The United Kingdom's Strategy for Countering Terrorism*. Home Office, 2018.
- House of Commons Report. *Report of the Official Account of the Bombings in London on 7th July 2005*. London: House of Commons, 2006.
- Hunn, Karin. "Nachtes Jahr kenren wir zuruck: Die Geschichte der turkischen Gastarbeiter in der Bundesrepublik" in *'Next Year We'll Go Back': The History of Turkish "Guest Workers"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Gottingen, 2005.
- Iannaccone, Laurence. "Voodoo Economics? Reviewing the Rational Choice

- Approach to Religio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Vol. 34 No. 1 (1995).
- Jessen, Frank & Wilamowitz-Moellendorff, “Das KopftuchEntschleierung eines Symbols?”, Konrad-Adenauer Stiftung, e. V.(ed.), *Zukunftsforum Politik*, Nr. 77. Sankt Augustt, Berlin, 2006.
 - LaFree, Gary & Gary Ackerman. “The Empirical Study of Terrorism: Social and Legal Research”, *Annual Review of Law and Social Science*, Vol. 5 (2009).
 - Khalil, J. “Radical Beliefs and Violent Actions Are Not Synonymous: How to Place the Key Disjuncture between Attitudes and Behaviours at the Heart of Our Research into Political Violence”, *Studies in Conflicts*, Vol. 37 No. 2 (2014).
 - Kharroub, Tamara. “Understanding Violent Extremism: The Missing Link”, *Arab Center Research Paper*. Arab Center Washington D.C., 2015.
 - Klanderman, Bert & Oegema, Dirik. “Potentials, Networks, Motivations and Barriers: Steps towards Participation in Social Moveme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2 (1987).
 - Luc-Marret, Jean. “French Experience in Dealing with Radicalization and Deradicalization”, presented to 2019 FRS-INSS Security Dialogue, (June 25, 2019). Unpublished.
 - MacNair, L. & R. Frank. “Voices against Extremism: A Case Study of a Community-Based CVE Counter-Narrative Campaign”, *Journal for Deradicalization*, Vol. 10 (2017).
 - Magnet, Shoshana & Corinne Lysandra Mason, “Of Trojan Horses and Terrorist Representations: Mom Bombs, Cross-Dressing Terrorists, and Queer Orientalisms”, *Canadian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39 No. 2 (2014).
 - Marone, Francesco. “Homegrown Terrorism in Italy: A Happy Exception in the West?”, presented to the 19th World Summit on Counterterrorism, (2019).
 - Maillard, Dominique. “The Muslims in France and the French Model of Integration”, *Mediterranean Quarterly*, Vol. 16 No. 1 (2005).
 - Moghadam, Assaf. “The Salafi-Jihad as a Religious Ideology”, *Combating Terrorism Center Sentinel*, Vol. 1 Issue. 3 (2008).
 - Orendt, Moritz. “The Integration of the Turks into German Society: Turks on Their Way to Parallel Societies or to True Integration?”, *Bilge Strateji*, Cilt 2, Say 1 3, (Güz 2010).
 - Piazza, James A. “Poverty, Minority Economic Discrimination, and Domestic Terrorism”,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48 No. 3 (2012).
 - Proctor, K. “Looking for More than a Job: The Tenuous Link between Poverty and Extremism”.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f The Economics-Countering Violent Extremism Nexus: Drivers and Solution on September 8 (Washington D.C.: Aspen Institute, 2015).
 - Rabasa, Angel & Cheryl Benard, Eurojihad: *Patterns of Islamist Radicalization and Terrorism in Europe*. RAND Corporation, 2015.
 - Rashid, Ahmed. *Taliban: Militant Islam, Oil and Fundamentalism in Central Asi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0.
 - Reinares, Fernando. *Al-Qaeda’s Revenge: The 2004 Madrid Train Bombings*. Woodrow Wilson Center Press and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7.
 - Roy, Oliver. *Globalized Islam: The Search for a New Ummah*.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4.
 - Schor, Ralph. “L’immigration en France au XXe siècle: Tendance d’ensemble”, *Historiens and Géographes*, No. 383 (2003).
 - Sen, Faruk. “1961-1991, Ein kritischer Rückblick auf die dreiBigjährige Migrationsgeschichte der Türk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eitschrift für Ausländerrecht* (1992).
 - Silke, Andrew. “Cheshire-cat Logic: The Recurring Theme of Terrorist Abnormality in Psychological Research”, *Psychology, Crime & Law*, Vol. 4 No. 1 (1998).
 - Tahiri, Hussein & Grossman, Michele. *Community and Radicalisation: An Examination of Perceptions, Ideas, Beliefs and Solutions throughout Australia*. Counter-Terrorism Coordination Unit, Victoria Police, 2013.
 - The National Commission on Terrorist Attacks Upon the United States, *The 9/11 Commission Report*. 2004.
 - Tverdek, Edward. “The Limits to Terrorist Profiling”, *Public Affairs Quarterly*, Vol. 20, No. 2 (2006).
 - United Nations, 62/272: “The United Nations Global Counter-Terrorism Strategy”, (2008).
 - United Nations, “Plan of Action to Prevent Violent Extremism”, (2016).
 -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9 Revisio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19.
 - Vidino, Lorenzo. “The Hofstad Group: The New Face of Terrorist Networks in

Europe”, *Studies in Conflict and Terrorism*, Vol. 30 (2007).

- WANA Institute, “Reconceptualizing the Drivers of Violent Extremism: An Agenda for Child & Youth Resilience”. (2016).
- Weil, Patrick. *La République et Sa Diversité: Migrations, Intégration, Discrimination* (Seuil: 2005).
- Weiss, Dietrich. “Ausländische Mitbürger in Hildesheim - Intergrationsprobleme und Intergrationshilfe”, *Hildesheim* (2005).
- Wiktoriwicz, Quintan. *Radical Islam Rising: Muslim Extremism in the West*.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5.

3. 기타

언론보도

- 『경향신문』, “佛 총파업 ‘마비’…500만명 참여”, (2006. 3. 28).
- 『국민일보』, “파리 폭동, 2년전보다 격렬”…차량·관공서 방화” (2007. 11. 28).
- 뉴시스. “광주 이슬람 출신 일부 초등생, 할랄식품 없어 점심 걸러”, (2019. 8. 12).
- 『동아일보』, “사르코지 “불법시위 타협 없다”, (2007. 11. 29).
- 『매일신문』, “대구 상리동에서 이슬람 시아파 무슬림 지도자 추모 행사”, (2019. 9. 9).
- 머니투데이. “佛 이슬람 테러범 메라, 3차례 공격 모두 촬영”, (2012. 3. 20).
- 『시사IN』, “런던 시민들은 왜 무슬림을 시장으로 택했나?” (2016. 5. 23).
- 연합뉴스. “‘유럽의 삶의 방식 보호’? EU 차기 집행위 새 직책명 논란”, (2019. 9. 18).
- YTN. “파리, 저소득층 청년 소요사태”, (2005. 11. 1).
- 『한겨레』, “불타는 파리…프 ‘이민자 폭동’ 재연 우려”, (2007. 11. 27).
- BBC. “German ‘Muslim Test’ Stirs Anger”, (2006. 2. 10).
- BBC. “Prevent extremism strategy ‘stigmatising’, warn MPs”. (2010. 3. 30).
- BBC. “7 July London Bombings: 15 Changes to Anti-Terror Planning” (2015. 7. 7).
- CNN. “Spain Train Bombings Fast Facts”, (2019. 2. 25).
- CNN. “What is ISIS’ Appeal to Young People?”, (2015. 2. 15).
- El Pais. “Sentencia por los Atentados del 11-M”, (2008. 7. 17).
- *The Guardian*. “21 Guilty, Seven Cleared over Madrid Train Bombings”, (2007. 10. 31).
- *The Guardian*. “Prevent gives people permission to hate Muslims - it has no place in schools”, (2016. 4. 4).
- *The Guardian*. “Police challenge Prevent critics to ‘stand up and be counted’”,

(2019. 2. 5).

- *The New York Times*. “Dutch Filmmaker, an Islam Critic, Is Killed”, (2004. 11. 3).
- *Newsweek*. “Why Southern Germany Has Declared War on Burqas and Muslims”, (2017. 8. 7).
- *Spiegel*. “A Sorry History of Self-Deception and Wasted Opportunities”, (2010. 9. 7).
- *Washington Times*, “EDITORIAL: Terrorists Hiding in Hijabs”, (2010. 11. 17).

회의자료

- OSCE. 2010 OSCE Supplementary Human Dimension Meeting Agenda.
- Uecker, Stefan. Statement by Germany presented to High-Level Conference of Heads of Counter-Terrorism Agencies of Member States (2018. 6. 29).

웹사이트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위키피디아 홈페이지.
- 한국위기관리재단 홈페이지.
- German Federal Office of Migration and Refugees 홈페이지.
- German Institute on Radicalization and De-radicalization Studies 홈페이지.
-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First World War 홈페이지.
- Le Plan National de Prévention de la Radicalisation 홈페이지.
- Leicester University Centre for Hate Studies 홈페이지.
- Mr. Online 홈페이지.
- Radical Middle Way FACEBOOK 페이지.
- UK Homeoffice 홈페이지.

박보라(朴保羅)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 동국대학교에서 범죄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헤다야센터(the Hedayah Center for Countering Violent Extremism)의 Counter Extremism Hub 회원임. 관심 연구 영역은 테러리즘과 대테러정책, 폭력적 극단주의와 대응(P/CVE), 테러 내러티브 및 테러목적의 인터넷·ICT 기술 악용, 인질협상, 국제범죄이며 주요 역서 및 논문으로는 『신원관련 범죄에 대한 유엔핸드북』 (공역), “극단주의에 관한 연구: 극단주의 테러범의 심리를 중심으로”, “소프트 타겟 테러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등이 있으며 2020년 상반기 『외로운 늑대 테러의 시대』 (공역) 출간 예정이다.